정·책·담·당·자·가·만·드·는·경·제·전·문·지

나라경제

지령100호기념호

김대중 대통령 특별인터뷰

기획특집/ 21세기 새 천년을 준비한다

정책 해설

세계10대 외국인 투자 유치국으로

99년 환경정책의 방향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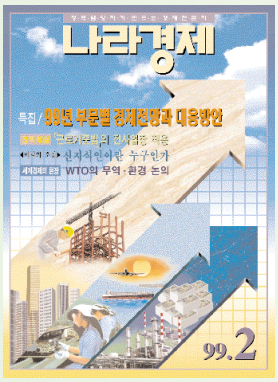
99.3

1999년 3월 1일 발행 · 제10권 제3호 · 1990년 11월 14일 등록 · 문화 라 04859호 발행처/KD 경제정보센터 130-0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1 전화 (02)958-4114 · 월간 ISSN1227-8033 3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경제정보센터 발행

나라경제

1999년 3월호
통권 제100호



1999년 2월호

4 **기념사** 신뢰와 동참의 '촉매'가 되기를 /이규성 · 재정경제부 장관

6 **지령 100호 기념**
김대중대통령 특별인터뷰

13 **「국민의 정부」 1년** - 경제정책의 성과와 과제
국민의 땀과 눈물이 외환위기를 이기다 /김봉익 · 재정경제부

기획특집 21세기 새 천년을 준비한다

20 **국가경제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학용 · 고려대학교 교수

24 **지식기반경제 시대의 도래**/이진순 ·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28 **세계금융질서의 재편**/정해왕 ·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33 **세계무역환경의 변화**/이경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36 **글로벌시대의 기업경쟁력**/손병두 ·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39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양영식 · 통일연구원 원장

43 **세계질서 주도할 환경문제**
/이상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경제수상

48 쌀 자급의 의미/서규용 · 농림부 농산원예국장

49 세계 최초의 뉴딜정책 – 청계천 준설사업
/신현국 · 환경부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

51 **경제정책의 산실을 찾아서** – 건설교통부 건설기술심의관실
/안진우 · 문화일보 기자

세계경제의 현장

55 WTO 분쟁해결제도와 우리의 과제/조태열 · 駐제네바 대표부

경제정책해설

60 세계 10대 외국인투자 유치국으로/권태균 · 재정경제부

64 99년 환경정책의 방향과 과제/전병성 · 환경부

68 민간의 자율적 직업훈련을 촉진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남석현 · 노동부

72 안방특허출원시대 개막
– 쌍방향 온라인 특허행정서비스 개시/송재기 · 특허청

경제동향

76 나라밖 : 브라질 금융위기의 재연/김원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79 **논 단** 입찰담합의 효율적 규제방안/어용호 · 공정거래위원회

82 **경제부처발간자료 안내**

경제정책의 산실을 찾아서 – 건설교통부 건설기술심의관실

정책담당자가 만드는 경제전문지

나라경제

편집/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발행/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경제정보센터

발행인/이진순 ·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편집인/한성택 · 재정경제부 경제홍보기획단 단장

편집위원
재정경제부/김봉익 · 경제홍보기획단 총괄기획과장
외교통상부/김영소 · 통상정보팀장
과학기술부/이만기 · 정책기획과장
농림부/이창범 · 법무담당관
산업자원부/이강후 · 법무담당관
정보통신부/김재섭 · 기획예산담당관
보건복지부/이계융 · 기획예산담당관
환경부/전병성 · 정책총괄과장
노동부/전운기 · 기획예산담당관
건설교통부/홍순만 · 기획예산담당관
해양수산부/박남춘 · 기획예산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이병주 · 총괄정책과장
KDI 경제정보센터/조병구 · 연구위원

편집간사/백우진 · 재정경제부 경제홍보기획단

편집장/김인철 · KDI 경제정보센터
편집기자/이기덕 · 이상주
업무/안의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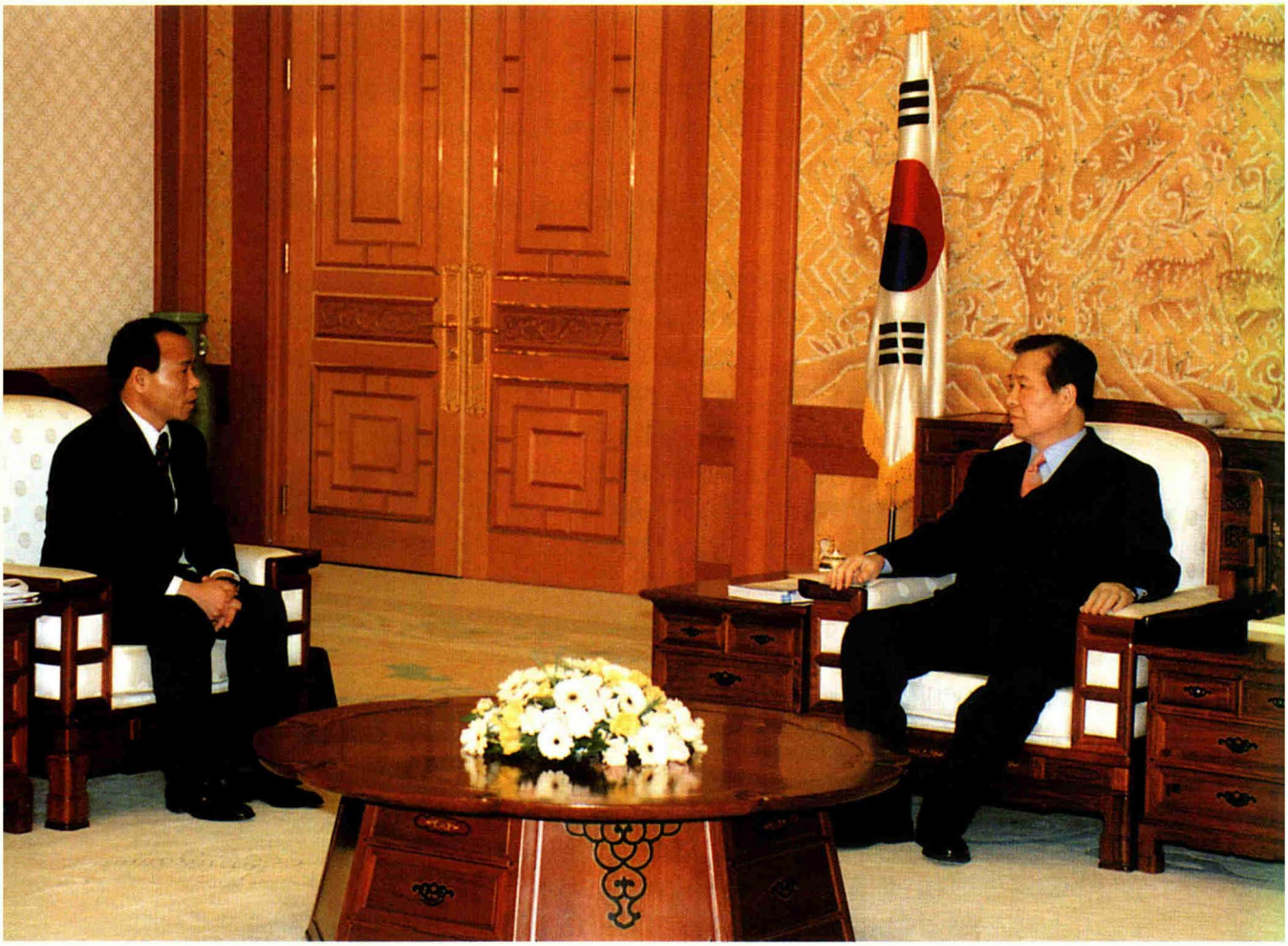
인쇄/유성사
표지 일러스트/오진목

나라경제 · 1999년 3월 1일 발행(매월 1회 발행) 제10권 제3호 (통권 제100호) · 1990년 11월 14일 등록 · 등록번호 문화 라 04859호
발행처/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경제정보센터
130-0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1
130-650 서울 청량우체국 사서함 113
대표전화 (02)958-4114 · FAX (02)3295-0748
홈페이지 주소 : http://epic.kdi.re.kr
인터넷 e-mail:ceenara@epic.kdi.re.kr
천리안:(가입자 이름)kcee, 하이텔:(가입자 이름)pcee

기사문의 : (02)958-4632, 4635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2)958-4327

*『나라경제』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필자의 소속 기관이나 본지의 공식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경제』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김대중대통령 특별인터뷰



• 대담자 : 이진순『나라경제』발행인(KDI 원장)

월간『나라경제』는 誌齡 100호를 맞아 김대중대통령과 특별인터뷰를 가졌다. 2월 12일 오후 청와대에서『나라경제』발행인 등 관계자들을 접견한 김대통령은 "지난 1년간의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고통을 참고 나눈 국민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하고,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상태에서는 벗어났지만 이에 자만하지 말고 착실하게 구조개혁 작업을 완결하여 이번 기회에 반드시 새로운 경제체질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민들은 대통령님께서 경제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함께 경제학자 못지 않은 해박한 지식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그러셨듯이 어려운 경제정책을 쉽게 풀어 설명하시거나 통계숫자를 정확히 인용하시는 모습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요. 아울러 특별한 경제 공부방법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소개해 주십시오.

▲ 저는 젊은 시절에 해운회사와 신문사를 직접 경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 당연히 경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때 경제는 살아있는 하나의 생물체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이는 그후 제가 경제를 이해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경제를 공부하는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항상 경제현상에 관심을 갖고 여러 사람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쓴 「대중경제론」도 지난날 우리 경제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정리해 둔 것입니다.

요즘은 경제부처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이 열심히 정리해 준 보고서가 경제공부의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 고도성장을 거듭했던 한국경제가 97년말 국가부도 위기를 맞아 갑자기 추락하자 전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 한국이 IMF 관리체제 1년 만에 국가신용등급이 투자적격으로 평가되는 등 급속히 경제회복을 이룸에 따라 세계가 또 한번 놀라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경제회복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경제회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금모으기 운동'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국민의 합심 · 협력과 정부의 일관성 있는 구조개혁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는 외환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 IMF와 IBRD를 위시한 국제금융사회에 우리정부의 개혁의지와 노력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한편, 외국인투자유치 환경을 대폭 개선하였고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수출입 금융지원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와 함께 정경유착 · 관치금융 · 부정부패로 인해 취약해진 경제구조와 체질을 튼튼히 바꾸기 위해 금융 · 기업 · 노동 · 공공 부문 등 4대 부문의 개혁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그 기본 골격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점차 경제회복의 조짐이 분명해지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투자적격의 평가를 받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가 곧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으로 취임해 위기극복을 위해 숨가쁜 1년을 보내셨습니다. 그 결과 외환보유고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경제가 정상을 되찾고 구조개혁도 괄목할 만

❝ 지난 1년간 힘들고 아쉬웠던 일이 많았고 앞으로도 갈 길은 멀지만, 우리 경제의 큰 흐름이 올바른 방향으로 잡혀가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고통을 참고 나눈 우리 국민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고 정책결정자로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고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 할 수 있는 경제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외환부족이었지만, 위기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날 양적 팽창 위주의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오랜 기간 누적된 모순과 구조적 병폐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 바로 위기의 본질인 것입니다. 정경유착과 관치금융, 부정부패와 집단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활력이 살아날 수 없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위기를 벗어나는 길은 이 낡은 틀을 쇄신하고 개혁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기본을 바로세우고 새로운 발전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일에는 고통과 희생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개혁과정에서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문을 닫아야 했고,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어야 했습니다. 급격한 경기침체로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일용직 근로자들의 생계가 막막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고통스런 구조조정의 과정을 지켜보아야 하는 대통령의 심정은 아마 충분히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픔을 참아내야만이 새로운 도약을 기약할 수 있기에 개혁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난 1년간 힘들고 아쉬웠던 일이 많았고 앞으로도 갈 길은 멀지만, 우리 경제의 큰 흐름이 올바른 방향으로 잡혀가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고통을 참고 나눈 우리 국민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 최근 외국의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평가는 '한국은 위기로부터 벗어났다'는 견해와 '구조조정 등이 마무리되지 않아 위기극복은 시작에 불과하다'로 양분돼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러한 외부의 평가를 어떻게 보십니까.

▲ 우리 경제가 당면했던 외환위기 상태로부터 벗어났다는 점만은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510억달러를 넘어선 가용외환보유고와 1,200원 수준에서 안정된 환율 그리고 지속

속적으로 하향추세에 있는 금리수준 등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환위기의 근본원인이 되었던 기업의 과다채무와 취약한 경쟁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으며, 특히 5대 그룹의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장래가 달려 있는 핵심과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단기간내에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모범사례로 평가되고는 있으나, 이에 자만하지 말고 착실하게 구조개혁작업을 완결하여 이번 기회에 반드시 새로운 경제체질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 국경 없는 글로벌 경제시대인 지금은 외국과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을 다져 나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외국의 유수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우리 역시 세계무대에서 외국기업과 경쟁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외국인투자유치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고,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투자 유치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외국인투자는 외채상환의 부담 없이 국내 생산과 고용을 늘려나갈 수 있고, 필요한 외자를 조달하면서 선진기술과 경영기법을 전수받을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과감한 외국인투자 자유화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업종을 대폭 개방하여 거의 모든 업종에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하였고, 공격적 M&A를 허용하였으며, 외국인토지법을 개정하여 외국인의 한국내 토지취득을 자유화했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주도록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원-스톱' 서비스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투자 규모가 97년의 69억달러에서 98년에는 연간기준 최대인 89억달러로 늘어났고, 99년 올해에는 1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투자유치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제도뿐 아니라 외국인투자를 위한 주변환경을 더욱 개선하는 데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뛰어난 리더십과 국민들의 의지에 힘입어 우리나라가 21세기 초입에 선진경제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 · 기업 · 노동시장 · 공공부문의 성공적인 개혁과 국민경제의식의 변화 등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피땀어린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1세기 한국경제를 이끌어 갈 구상을 밝혀 주십시오.

▲ 「국민의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21세기 한국 경제는, 책임과 공정성의 바탕 위에 경쟁과 효율의 시장경제 원칙이 확립되고 의식과 관행이 국제기준에 부합되며 고부가가치형 지식기반 산업이 중심이 되는 경제체제입니다.

이러한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정치개혁과 규제개혁, 금융자율화를 완결하여 시장기능의 왜곡이 해소되도록 함으로써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경제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재벌개혁을 완수해 경영의 투명성과 대주주의 경영책임을 분명히 하고, 핵심부문에 경영역량이 집중된 건전하고 경쟁력 높은 기업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울러 책임과 성과가 공정히 배분되는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내 · 외국인의 차별이 없고 국제규범이 준수되는 열린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문화 · 관광 · 디자인 · 영상 · 정보

통신 등 지식기반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지식산업이 성장과 고용을 이끌어 가는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4대 개혁을 비롯해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 전반의 개혁은 바로 이러한 과제들의 실현을 통해 21세기를 준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 나라 밖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단결력과 교육열, 강한 의지와 추진력 등을 경제위기를 이겨내고 미래를 밝힐 원동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사람들은 '신지식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국민이 신지식인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새로운 나라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지금 우리는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바뀌는 대전환기에 살고 있습니다. 즉, 자본이나 노동보다는 사람의 두뇌 속에 들어 있는 지식이 더 중요한 생산요소가 되는 사회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제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금융 · 유통 · 정보통신 등 서비스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여기에 착실히 대비해서 세계경제의 흐름에 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지식인 운동은 이 같은 환경변화에 부응해 개인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자는 운동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암기 위주의 교육과 학력으로 평가받는 사회적 폐단으로 인해, 개인의 독창성이 발휘되지 못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학력과 직업에 상관 없이 지식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능동적으로 창출하는 사람, 기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상으로 자신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혁신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이 바로 신지식인입니다.

신지식인화를 통해 21세기 세계일류국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범국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2의 건국' 운동의 핵심과제 중 하나가 '신지식인화'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취지의 반영이라 하겠습니다.

— 대통령님께서는 취임후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남북경협을 독려해 오셨습니다. 남북경협의 진전은 궁극적으로 통일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문제 등 변수가 많아 정경분리 원칙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정부가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해서 남북간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첫째, 북한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 둘째, 상호이익과 민족공동의 복리를 도모하며 셋째, 남북간 상호신뢰와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중국과 대만의 경우에도 정경분리에 의한 경제협력으로

사진 오른편으로부터 김대중대통령, 『나라경제』 관계자들 : 이진순 발행인(KDI 원장), 송대희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한성택 편집인(재정경제부 홍보기획단장), 김인철 편집장

양측이 커다란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력도발이나 핵개발 의혹 등은 결국 한반도의 냉전구조에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냉전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볼 때, 확고한 안보와 화해 · 협력을 병행 추진하는 우리의 대북정책이야말로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막고 공동번영의 토대를 구축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안문제는 현안대로 실효성 있게 대처해 가면서, 정경분리 원칙을 포함한 우리의 대북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 월간 『나라경제』는 국민들이 경제정책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때 비로소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창간되어 이제 통권 100호에 이르렀습니다. 本誌를 통해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 먼저 월간 『나라경제』의 통권 1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나라경제』는 우리 경제의 실상과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과 정부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경제정책의 성패는 우선 정부가 얼마나 정확한 현실인식과 미래에 대한 예측능력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여 이를 관철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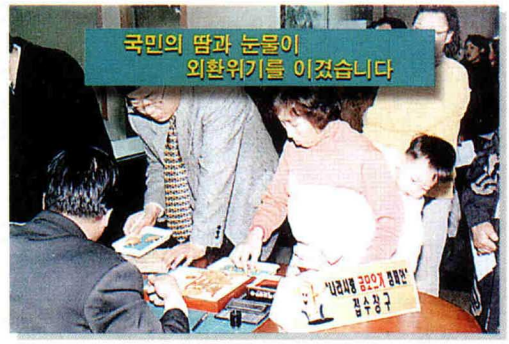
그러나 올바른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이 정부의 판단과 처방을 신뢰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날 저는 기업인들로부터 '정부 생각과 반대로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이 일은 결코 웃어넘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큰병을 앓고 몸을 추스르는 단계입니다. 완전한 건강을 회복하느냐의 여부가 앞으로 2~3년 안에 결정될 것입니다. 정부는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고 이에 적극 따라 주어야 하겠습니다.

국민의 땀과 눈물이 외환위기를 이기다

김 봉 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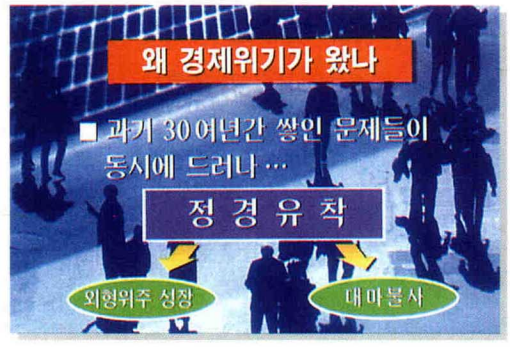
재정경제부
경제홍보기획단 총괄기획과장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2월 25일 출범한 「국민의 정부」가 이제 만1년을 맞고 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 경제에는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다.

97년 11월, 우리는 6 · 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할 만한 換亂에 직면하였으나 우리의 저력은 시련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民官이 하나가 되어 추진한 금모으기 운동, 은행 구조조정을 비롯한 4대 개혁과제의 전국민적 동참 등을 통해 우리는 외환위기를 극복하였고 국가신용 등급은 투자적격 수준으로 다시 올라섰다.

우리 국민의 땀과 눈물이 외환위기를 이겨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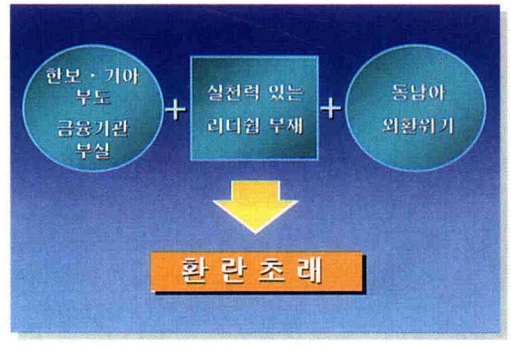


경제위기, 어떻게 왔나

換亂 직후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참담했다. 지난해 이 무렵 하루에 약 150개의 기업들이 도산하였고, 실업자는 하루에 1만명씩 늘어났다.

우리가 경제위기를 맞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지난 30여년간 누적된 외형위주의 성장이나 '大馬不死'의 잘못된 신화에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경유착의 골이 너무나 깊었기 때문이다.

정경유착의 표본인 한보 · 기아 등 대기업이 연이어 부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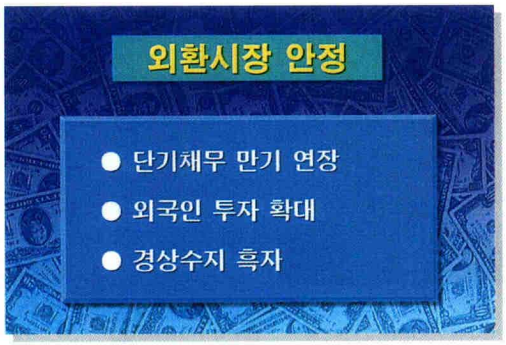


내면서 부실채권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러한 가운데 단기 외채에 과도하게 의존하였던 금융기관들의 자금운용능력이 문제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설상가상으로 동남아 외환위기의 여파가 밀려들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를 해결할 실천력 있는 리더십이 없었다. 결국 97년 11월 21일, 우리나라는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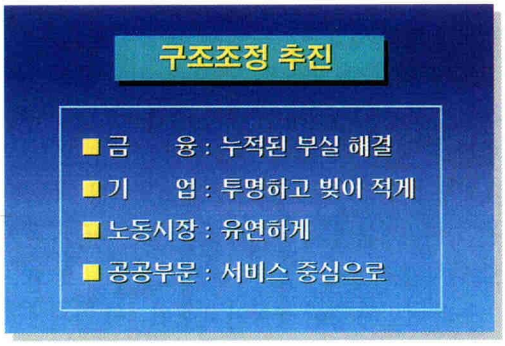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과 정부의 노력

「국민의 정부」는 단기채무의 만기를 연장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 및 환경 개선에 힘쓰는 한편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을 치유하기 위해 금융 · 기업 · 노동시장 · 공공부문의 4대 개혁과제를 추진해 왔다. 또한 경상수지 흑자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외환 ·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대외신인도가 회복되기 시작하였고 실물경제의 점진적인 회복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불가능한 금융기관 91개를 퇴출하여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였고, 회생 가능한 금융기관은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증자를 지원하여 은행 BIS 비율을 10% 수준으로 향상시켜 모든 은행을 건전하게 탈바꿈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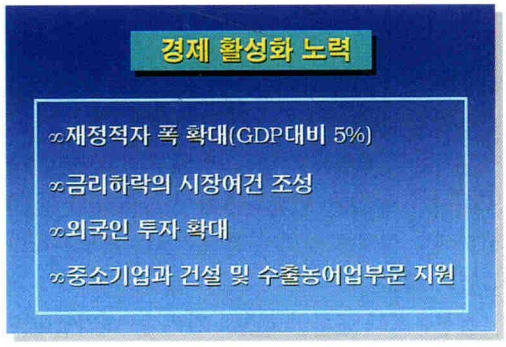
기업 구조조정은 경영실적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며 부채비율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 왔다.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였고 결합재무제표를 도입하였다. 기업의 재무구조를 튼튼히 하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부채비율을 국제적 수준인 200% 정도로 낮추고, 주주와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조정제와 근로자파견제를 도입 · 시행하고 있고 이들 제도는 점차 산업현장에 정착되고 있다. 선진외국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시장이 유연할수록 실업률은 낮아진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의 조직 및 인원감축을 통해 '작고 효율적' 인 정부로 만드는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21개 중앙 정부부처를 17개로 축소하였고, 올해초 정부에 대한 경영진단을 바탕으로 정부기능을 개편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은 이를 통해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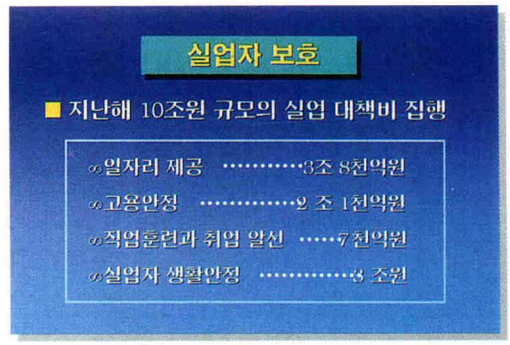
경제활성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정적자 폭을 GDP의 5% 수준까지 늘렸고 금리가 하락할 수 있는 시장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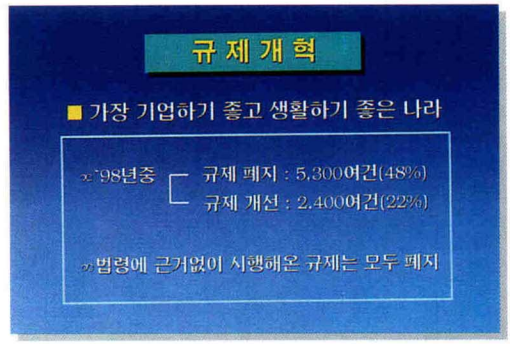


을 조성하였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시장 실세금리인 회사채 수익률을 보면 98년 1월에는 23.4%로 치솟았으나, 금년 2월초에는 8.1%로 크게 떨어졌다.

정부는 고용창출, 고용유지, 직업훈련, 실업자 보호 등 다각적인 실업대책을 펴고 있다. 지난해에는 일자리 제공사업에 3조 8천억원, 고용안정사업에 2조 1천억원,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에 7천억원, 실업자 생활안정에 3조원 등 모두 10조원 규모의 실업 대책비를 투입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를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우리 제도를 국제적 수준에 부합되게 정비해 왔다. 사전적인 규제는 풀되 사후적인 감독을 강화한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 투자 및 외환관리제도를 개편하였다.





지금 우리의 경제상황은

그동안의 노력으로 지난 1월 Fitch IBCA, S&P 등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들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투자적격 수준인 BBB-로 상향 조정하였고, 무디스社도 지난 2월 투자적격 수준인 Baa3로 상향조정하였다.

외환 · 금융시장도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 금리는 외환위기 초기 30% 수준에서 한자리수로 안정되고 있고, 주가는 구조조정의 성과가 반영되면서 꾸준히 회복되고 있다. 또한 97년 12월 2,000원 가까이 치솟았던 환율도 1,200원 내외(99. 2.)로 안정되고 있으며, 외환위기 초기 39억달러(97.12.18)로 바닥을 드러냈던 가용외환보유고가 99년 2월 15일 현재 사상 최대인 510억달러로 늘어났다.

외채구조도 빠르게 개선되어 총대외지불부담 중 단기외채 비중이 97년 11월 55%에서 99년 1월말 현재 21.5%로 감소하였다.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신흥시장 국가간의 차별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브라질 · 인도네시아 · 러시아에 비해 가산금리가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도 98년 10월부터 본격적인 증가세를 나타내어 지난 97년에는 70억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98년에는 89억달러로 대폭 확대되었다.

여기에다 산업생산이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실물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산업생산은 98년 11월 이후 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반도체 · 자동차 등 주요 업종의 개선추세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어음부도율도 감소추세를 지속하고 있고, 98년 12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98년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경상수지는 97년 82억달러 적자에서 98년에는

400억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이와 같이 짧은 기간 내에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의지와 리더십, 여기에 국민의 단합된 노력이 함께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회복은 이제 시작에 불과함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아직 공장이 충분히 가동되고 있지 않고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의 평가인 'BBB-' 'Baa3'는 투자적격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앞으로 구조조정의 내실화가 더욱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올해는 경제회복의 싹을 키우는 데 주력

올해에는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경제회복의 싹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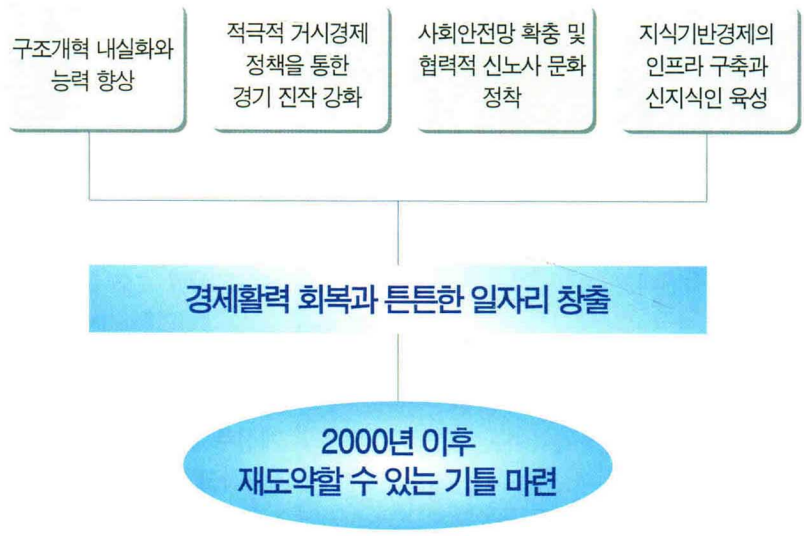
외부적인 여건은 우리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브라질 · 터키 · 중국 등 신흥시장국가들의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세계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지식기반국가로의 이행노력 강화, EMU 출범에 따른 경제블럭화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Y2K 문제,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문제 등도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국내경제는 지난 한해 동안 4대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기본 틀을 마련하였지만, 아직 사회 전반이 낙후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국제경쟁력의 회복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또한 물가안정 추세가 계속되고 실물경제의 회복세가 점차 가시화되고는 있으나 잠재성장률(4~5%)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고 실업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국내외 경제상황하에서 정부는 올 한해 다음과 같은 기조 아래 경제정책을 펴나갈 것이다.

우선, 하드웨어적인 개혁의 틀에 소프트웨어 위주의 내실을 채워 넣어 우리 경제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추는 한편 노사협력의 신노사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지난해 몸집

99년도 경제정책 방향



을 줄인 공공부문은 올해에도 개혁을 더욱 가속화하여 핵심역량 위주로 개편해 나갈 것이다.

둘째, 경제활력의 회복에 힘쓸 것이다. 거시경제정책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경기를 진작하고, 총력 수출지원태세를 강화하여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다.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투자가치를 증대시켜 150억달러의 투자를 목표로 하여 연말까지 가용외환보유고를 550억달러 이상 달성함으로써 금년중 순채권국으로 전환되도록 할 것이다.

셋째,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신노사문화를 창출해 나갈 것이다. 우선 졸업자들의 미취업으로 인한 실업자의 증가가 예상되는 1/4분기중 실업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실업자보호대책의 내실화를 꾀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신노사문화를 창출할 것이다.

넷째,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스템 디자이너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신지식인의 양성을 지원하고 학교교육과 직업교육과의 연계를 추진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자격기술의 개발 보급 등 지식인프라를 정비할 것이다.

다섯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최근 지역경제가 겪는 어려움은 특정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換亂 후 가장 어려운 지역은 換亂 전에도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이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중앙 · 지방간 기능과 재원을 재조정하고 중추기능의 지방이전 추진,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배치, 지역차별 없는 인사 · 예산배정을 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투자를 유치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여섯째, 문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고부가가치화를 이룩하고 관광산업을 21세기 핵심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비하여 국내산업의 환경친화성을 제고할 것이다.

시련을 딛고 도약을 향해

이러한 정부정책이 성공하려면 온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아직 경제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우리 주위에는 많은 실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제적인 경제상황도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비록 최근 경제지표가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만족할 단계는 아니다.

올해는 착실한 구조조정과 적극적인 경기활성화 노력에 힘입어 2% 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고 상반기중에는 성장률 감소세가 둔화하고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플러스 성장이 기대된다. 다만 실업이 상반기중에 다소 증가되고 하반기 이후에나 감소될 전망이어서 국민 대화합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사회불안과 노사불안 그리고 지역갈등은 국가신인도를 다시 추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겨우 돋아난 경제회복의 싹을 꺾어버릴 것이다.

다시 한번 기본원칙에 충실한 제도정비와 새로운 관행의 정착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제거하고 자기책임의 시장규율을 확립하여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처하여 창의와 자율이 숨쉬는 시장경제를 만들어가야 한다.

국가경제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학용
고려대학교 교수
한국경제학회 회장

우리는 작년에 겪었던 IMF체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특히, 국제사회가 얼마나 냉엄하며, 한 나라의 경제가 망한다는 것은 그 나라 국민들에게 한없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다국적 투자가들이나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고려밖의 사항이라는 사실 그리고 국가경제는 대외여건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21세기 국제환경 변화와 한국경제의 과제

IMF 체제의 시련을 무사히 극복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엄청나게 변한 국제적 여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놓여 있다. 우선 90년대 중반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체제는 완전한 자유무역을 요구함은 물론 앞으로 환경협상(Green Round)과 노동문제 협상(Blue Round) 등을 전개할 전망이고, 이들 협상들은 우리에게 한층 더 엄격한 환경보호와 노사규정을 요구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 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에 틀림없다. 더구나 우리는 1996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여 선진국들과 동등한 국제적 무역규범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 세계경제에 대한 책임을 다 해야 할 입장이다. 가난한 후발개도국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야 하고, 더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수용해야 하며, 기업운영 및 각종 사회조직의 투명성을 보여줘야 한다.

특히,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다자간 투자협정(MAI)이 이루어지면 우리 기업들은 국내시장에서도 외국기업들과 똑같은 조건하에서 경쟁해야 한다. 물론 우리 기업들도 OECD 회원국에 대해 자유로운 투자가 보장되겠지만 외국기업들보다 좋은 조건을 기대할 수는 없다.

21세기 한국경제의 국제적 위상을 생각할 때 한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으로 인정될 수 없다. 무역규모로 보나 GNP 규모로 볼 때 10위권의 경제국으로 부상할 것이며, 따라서 그런 경제규모에 걸맞는 국제적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할 입장이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매년 10만대 이상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는 4개국 중 하나이며, 반도체부문에서도 미국 ·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 수준에 올라서 있다. 조선부문에서도 일본과 함께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다. 이런 사실은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입장을 점점 어렵게 만들 요인이기도 하다. 정부의 모든 정책들과 기업운영이 투명성을 요구받게 되고, 국제규범에 하나라도 어긋남이 있는가를 항시 감시받게 된다.

이미 한국은 선진국들로부터 첨단기술 이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중국을 위시한 여러 개도국들로부터 추격을 받아왔다. 즉, 선진국들과 개도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소위 '샌드위치' 현상을 겪고 있다. 21세기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가 계속 성장하려면 기업들이 자력으로 기술개발에 성공하여 선진국들의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연구개발과 교육에 엄청난 투자가 요구됨을 의미한다. 투자와 동시에, 선진국들이 몇 세기를 거치며 쌓아온 교육과 연구개발체제를 갖추고 경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그러면 21세기에 한국경제의 과제는 무엇이겠는가. 상기한 모든 국내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가 계속 성장을 유지하려면 무역확대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경제적 위상이 아무리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수출주도형 성장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따라서 21세기에 한국경제가 직면할 과제는 과거의 그것과 변함이 없다. 단지, 우리의 수출환경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사실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은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 사회 전체의 조직과 운영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경쟁력은 낮은 임금이나 정부보조 또는 환경파괴적 경영에서 얻을 수 있었지만 21세기에는 그런 경쟁력은 기대할 수 없다.

결국 한국경제가 직면할 21세기의 과제는 교육, 사회간접자본, 연구개발 그리고 국민의식을 포함하는 사회하부구조를 어떻게 조정하여야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된다. 즉, 21세기의 한국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은 사회조직과 그것의 운영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어떤 기업환경을 조성해 주며 또 국민의식을 어떻게 유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현대자본주의체제의 특성

역사적으로 자본주의체제는 정부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重商主義(mercantilism)를 거쳐 시장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소위 시장경제로 발전하여 왔다. 20세기초에는 다시 정부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복지국가(welfare state)로 변했고, 1980년대에 들어와서 다시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신시장경제(neo-market economy)로 변하여 왔다.

한국경제가 직면할 21세기의 과제는 교육, 사회간접자본, 연구개발 그리고 국민의식을 포함하는 사회하부구조를 어떻게 조정하여야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된다. 즉, 21세기 한국의 국제경쟁력은 사회조직과 그것의 운영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1980년대에 미국과 영국에서 있었던 구조조정과 그것의 위력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미국의 조세제도 개혁과 자율적 기업합병은 성공적인 구조조정으로 알려져 있다. 또 영국에서의 국영기업들의 민영화 내지는 폐쇄조치 그리고 대대적 해외자본유치는 영국경제를 재건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신시장경제에서도 모든 경제문제들을 완전히 시장기능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몇 가지 중요한 시장실패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勞使대립을 포함하는 독과점의 비효율성 문제, 환경파괴문제를 포함하는 外部非經濟性 문제, 연구개발을 포함하는 외부경제성문제, 사회간접자본을 포함하는 공공재의 중요성, 도덕적 해이와 주인 · 대리인 문제를 포함하는 정보비대칭성 문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 등은 정부의 역할을 요구한다.

노사간의 극단적 대립은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며, 이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정역할은 어느 나라에서든 존재한다. 또 자연환경의 私有權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파괴 문제도 대내적 효율성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책임문제로 인해서도 어느 정도의 규제는 불가피한 것이다.

국방, 사법 · 치안, 각종 교통시설 등의 공공재들은 어느 나라에서든 정부의 책임하에

제공되고 있다. 연구개발과 교육이 갖는 외부경제성 때문에 특허제도를 인정하고 기초교육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것도 어느 나라에서든 공통된 성격이다. 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실업보조를 포함하는 사회보장제도를 갖는 것도 현대자본주의체제의 공통된 특성이다.

앞에서 설명한 이유들로 인해 어느 국가든 일정한 규제를 포함하는 제도(institution)를 갖게 된다. 독과점의 폐해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각종 환경보존을 위한 규제법, 공공재 공급을 포함하는 입법 · 행정 · 사법제도, 특허법과 교육제도 그리고 경쟁에서 낙오된 실업자와 장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모든 제도는 시장경제의 틀이라 할 수 있다. 즉, 시장기능은 이 틀 안에서 작동하게 된다는 말이다. 문제는 이런 틀이 국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같은 틀이라고 해도 어느 국가에서는 잘 작동되어 시장실패를 시정해 주는 데 비해 어떤 국가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시장실패를 시정하기 위해 일정한 제도를 만들었지만 시장실패가 그대로 계속된다면 그것은 정부실패라고 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한강상류의 맑은 물을 보호하기 위해 폐수처리시설을 법제화한다고 하자. 그러나 그런 시설이 제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하는 사업자들과 또 그들을 감독해야 할 공직자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질오염은 계속되고 동시에 시설설치 비용과 감시 · 감독비용은 그대로 발생한다. 수질오염이 계속될 경우 국민건강을 해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공업용수의 비용증가도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시장실패를 막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국가에서의 기업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데 비해 그렇지 못한 국가에서는 시장실패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이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좀더 넓게 본다면, 한 나라의 국가제도를 집행하는 거래비용(운영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기업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新制度學派의 주장이다. 어떻게 하면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국가경제체제를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 21세기 시장경제체제의 과제이며, 이것이 시장경제의 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다.

정부역할의 재조명

1980년대부터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서구 선진국들은 정부규제를 완화하고 공기업의 민영화를 확대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이에 따라 다른 모든 국가들에서도 정부기능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고 있으며, 우리도 예외는 아니어서 정부규제 완화가 90년대부터 시도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것은, 필요 이상의 정부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지 기본적인 정부역할을 축소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위에서 이미 지적한 시장실패를 시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제들은 완화해서도 안되고 또 완전히 철폐해서도 안된다. 시장실패를 시정하는 데 꼭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되 그것들이 효과적으로 작동되게 하자는 것이다.

서울시의 외곽에는 최근에 넓은 자동차도로들이 많이 건설되어 교통소통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데 곳곳에 보행자들을 위한 횡단보도와 교통신호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보행자가 별로 없는 새벽이나 심야에도 교통신호들은 작동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적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질주하는 경우가 많다. 잘못된 제도가 다량의 범법자들을 양산하고 또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에는 교통신호

대를 설치하되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가서 신호작동 버튼을 눌러야만 적신호가 들어오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불합리한 교통신호라는 규제의 한 예이지만 우리 사회에는 이런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다. 우선 이런 불합리한 규제는 국민들로 하여금 법이나 규제에 대한 불신감 내지는 저항감을 갖게 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상실케 한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와 해상사고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높은 각종 사고율은 우리 기업들의 비용을 증가시켜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정부역할이 기업경쟁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예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탁아소와 같은 어린이 보호시설을 전국에 골고루 설치하여 안전하고 아주 저렴하게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한다면 젊은 주부들이 쉽게 직장에서 일할 수 있다. 이것은 젊은 부부들의 소득증대를 가능하게 하고 또 사장되어 있는 여성인력을 활용케 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갖게 한다.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정부보조, 저렴한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의 확대, 산업폐기물 처리를 위한 정부의 간접적 지원 등은 모두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또 국제적으로도 수용되는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

제도적 개혁과 국민의식의 변화

시장경제체제가 사회주의체제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이유는 경제주체들의 합리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한 데 있다. 경제주체들이 그들의 이득을 최대화하도록 하는 유인체제가 시장경제를 성공시킨 요인이다. 그러나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것은 개인의 합리성과 국가의 합리성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때문이다. 즉, 개인의 이득이 사회의 이득과 상충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따라서 개인의 이득과 국가적 이득이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하다.

> 어떻게 하면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국가경제체제를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 21세기 시장경제체제의 과제이다. 모든 제도적 장치들이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설정될 때 우리의 시장경제체제가 거래비용을 최소화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21세기 지구촌 시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주체들이 그런 제도적 장치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것에 순응해 주지 않으면 제 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아무리 합리적인 교통신호체계를 갖고 있다고 해도 다수의 보행자들과 운전자들이 교통신호를 무시하면 교통경찰 비용만 증가할 뿐 교통혼잡과 사고율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제도를 민주적으로 확립해야 하는 필요성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개인의 편익만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불합리성을 초래하여 사회 전체가 손해를 보는 소위 국지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모든 제도적 장치들이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설정될 때 국지적 합리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국지적 합리성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의식개혁이며,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의 시장경제체제가 거래비용을 최소화하여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21세기 지구촌 시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지식기반경제 시대의 도래

이진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정보혁명과 기술혁명은 과거의 기술혁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우리 사회 전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들에 의하여 촉발되기 시작한 소위 '지식기반경제'의 도래는 경제구조와 기업의 비즈니스 방식뿐만 아니라 사회의 근본가치, 정체성, 문화와 시민의식에 이르기까지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따라서 지식기반사회라는 표현이 보다 적절할지도 모른다).

지식 또는 지적자본이 개인 및 국가의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지식기반경제란 지식 또는 지적자본이 개별 경제주체 및 국민경제 전체의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요소임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지식을 다른 생산요소와 확연히 구분짓는 특성은, 한 사람이 지식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non-rival)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지식은 다른 생산요소(자본 · 토지)와 같이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본과 토지의 생산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지만, 지식은 이러한 물리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 나아가 지식의 축적과 확산은 새로운 상품과 공정을 끊임없이 개발하도록 촉진시켜 다른 생산요소들이 갖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한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식과 정보의 확산은 각 개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사회의 완전한 참여자가 되게 함으로써 민주적 제도와 기관들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하는 기초가 된다.

이와 같이 지식기반경제의 성장은 새로운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생산성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약속하고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미의 분배와 형평의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단순히 경제적인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도 근본적인 사회적 이슈를 제기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사회적 결속을 가져올지, 아니면 사회적 균열을 가져올지의 여부는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과정을 어떻게 잘 다루어 나갈 것인가에 달려 있다.

'지식기반경제' 시대 도래가 갖는 현실적 함의는 국가별, 개별 경제주체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식기반경제'는 지식집약적 고부가가치 활동의 비중이 높아지는 소위, 경제의 '지식집약화' 현상에 상응하는 개념으로서, 80년대 이후 가속화된 '세계화'의 결과, '요소집약적' 低附加 활동/산업이 개도국에 이전되고 '지식집약적' 高附加 활동/산업이 선진국에 집중되는 새로운 국제분업구도의 형성을 그 배경으로 한다.

선진국들에게 있어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은 현 발전단계가 연속되는 '진화'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고소득고용의 창출 등 지식기반경제 시대의 잠재적 혜택을 가장 자연스럽게 실현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기술의 도입 · 확산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으며, 오히려 지식기반경제 시대의 도래로 구조적 실업의 증가, 다수 근로계층의 도태 등 심각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 · 영국 등을 제외한 대다수의 OECD국가들의 경우,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 실업률이 증가하고 파트타임의 증가 등 고용의 질 또한 악화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다수 한계계층의 존재가 향후 미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리란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안고 있는 이 같은 현실적 문제에 당면하여, '시스템 전환'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대대적이고 광범위한 사회경제체제 재편 노력에 착수하고 있다.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있어서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은 '지식 · 혁신활동'과 연관된 사회의 제반요소(제도 · 정책 · 문화)가 총체적으로 결합된 구조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국가혁신체제'를 구성하는 제반 요소와 국내 경제주체 모두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개혁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개도국의 경우, 지식기반경제 시대의 도래는 기회라기보다 새로운 도전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즉, 지식기반경제의 도래가 有形資本(physical capital)의 축적이 뒤져 있는 개도국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窓'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으나, 개도국들은 기본적으로 산업기반, 인적자본, 제도적 자산(institutional capital) 등 지식창출과 혁신활동에 필요한 '기초 요인' 모두가 절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세계은행이 지적한 대로 개도국 나름대로의 획기적인 대응이 없을 경우 향후 선후진국간 격차가 지속적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경제는 현재 개도국과 선진국의 境界 위치에 있다. 따라서 '기초 요인'의 열위를 극복하고 지식기반경제 시대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이상의 치밀하고 창의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지식기반경제'의 도래는 경제구조와 기업의 비즈니스 방식뿐만 아니라 사회의 근본가치, 정체성, 문화와 시민의식에 이르기까지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지식기반경제의 성장은 새로운 기회의 장을 제공하지만, 한편으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은 다양하고도 근본적인 사회적 이슈를 제기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식기반경제 시대의 도래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

21세기 한국경제의 견실한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낙후된 제도 · 정책환경이 전면 재정비되어야 한다. 경제위기를 계기로 추진중인 구조조정 및 각종 규제개혁은 경제의 투명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 과제이므로 지속적인 노력하에 성공적으로 완료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자본 · 기업의 국제적 이동성이 급속히 확대됨으로써, 제도 및 의사결정과정의 합리성 · 공정성 · 효율성 등 국제간 이동이 쉽지 않은 시스템 자산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시 · 제도적 환경의 정비 외에도 교육 · 인력개발, 과학기술, R&D, 정보인프라 등 지식의 창출과 확산 및 활용에 관련된 미시적 정책환경을 대폭 정비할 것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먼저 지식의 창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비중(GDP 대비)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임에도 그 성과는 저조한 실정이며,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청년층)이 OECD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하는 등 양적 측면에서는 우수하나 배출된 인력의 질은 열악하므로 교육 및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대학의 연구개발 향상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대학은 인재 · 지식의 공급에서 가장 중추적 위치에 있으므로 대학개혁 없이는 연구개발투자를 늘려도 우리 사회의 지식창출기반을 조성하기 어렵다.

한편, 인력양성이 산업수요와 유리되어 기업에서 사원을 채용한 후 재교육을 시켜야 하고 대학 및 정부연구소의 연구개발 과제가 산업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우리의 실정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획일적 통제하에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교육체계를 산업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체계로 개선하고, 산업의 수요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고 질적 수준도 향상될 수 있도록 직업훈련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산업수요와 연계된 연구개발 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연구지원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지식의 창출이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공급자 위주로 운영되는 것은 수요자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정책결정 구조에도 원인이 있다. 따라서 인력양성 · 연구개발 등에 산업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그리고 부족한 국내의 지식창출 역량을 보완하고 전세계적으로 재편중인 연구개발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하여 해외지식의 유입을 활성화해야 한다.

지식의 확산 및 활용 증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기술혁신의 확산과 산업의 융합화로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개발체계와 유연한 산업구조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여 학습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지식 및 기능이 신속히 접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시장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간 분업의 확대를 통한 다품종소량형 생산체제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중소 · 벤처기업의 강화대책도 모색해야 한다.

지식확산의 가장 효과적 메커니즘은 지식을 가진 '사람의 이동' 이므로 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정비해야 한다. 즉, 전문인력의 자유로운 직장 이전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 요인을 제거하고,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 교육기관과 연구기관 간의 상호파견 등 인적교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한편 기술 및 지식이 체화된 인력이 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효과적인 지식확산의 수단이므로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사업화와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테크노파크 등과 같은 기술이전 매개체를 다수 설립하고, 기업 · 연구기관 · 대학간의 원활한 인적교류를 통하여 산업현장과 연구기관간 네트워크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그리고 지식기반사회의 기본인 정보인프라의 구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보인프라의 구축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의 지식확산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기에 정부는 '창조적 파괴자' '시스템 고안자' 역할 해야

지식기반경제 시대의 경제운영 주체는 민간이 되어야 하며, 정부는 지식의 창출 및 확대 재생산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

아야 한다.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기에 정부는 과거 산업자본기에 형성된 낙후된 제도와 관행의 '창조적 파괴자',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시스템 고안자'(system designer)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지식정부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식정부는 '국내자원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세계시장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지원하는 협력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행정 · 산업단위 위주의 현재의 조직을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하여 정보화 · 지식화로 대변되는 경제 · 사회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하고, 이를 선도할 정부기능을 확립토록 해야 한다.

또한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기에 예상되는 구조적 실업이나 계층간 격차가 확대되는 것에 대비하여, 지식과 정보에의 접근을 최대한 보장하는 사전적(ex-ante) 차원의 사회보장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종전의 사후적(ex-post) 소득보전방식보다는 지식 등 소득원천에 대한 접근면에서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력개발 · R&D · 정보인프라 등 혁신의 인프라 부문에 정부 지원을 집중하되, 현행 지원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산업간 경계가 무너지고 혁신의 시스템적 성격(systemic nature of innovation)이 증가하여, 특정산업 내지 개별기업 중심의 지원에 의해서는 소기의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 추가적 사업개발이나 재원투입보다는 현행 지원체계 전반을 재정비하며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우선적으로 주력해야 한다. 정부의 R&D 투자를 확대할 필요는 있으나, 현행 사업관리체계를 재정비한 후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유사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관련법을 정비하며, 행정조직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의 타당성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들을 상호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투자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교육 · 중소기업 · 과학기술정책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여, 지방정부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분권적 체제로 이행해야 한다. 중앙집중적인 지원체제로는 다양한 현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실험이 일어나기 곤란하다. 혁신경쟁이 가속되면서 전세계적으로 혁신의 중추가 정보의 신속한 파악과 협력체제 구축이 용이한 지역단위로 이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강력한 중앙중심의 경제발전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지역혁신 시스템을 위한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내 대학 · 연구기관 · 기업 등으로 구성되는 지역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들이 군집하여 생산공정은 물론 서비스기능을 분업화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하고 혁신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끝으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있어 불필요한 시행착오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외국의 사례를 다수 참조하는 한편, 선진 다국적기업의 국내진출을 적극 촉진하여 우리의 취약부분을 보강하고 혁신적 환경을 조성하는 촉발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는 현재 개도국과 선진국의 境界 위치에 있다. 따라서 '기초요인'의 열위를 극복하고 지식기반경제시대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이상의 치밀하고 창의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21세기 한국경제의 견실한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낙후된 제도 · 정책환경이 전면 재정비되어야 한다.

세계금융질서의 재편

정해왕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최근 격변하고 있는 국제금융환경은 정보·통신 관련 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21세기에 들어서도 빠른 속도로 변화할 것이며, 그 파급효과는 금융 부문뿐 아니라 실물이나 대외 부문에도 영향을 끼치는 광범위하고도 혁신적인 내용이 될 전망이다. 1990년대에 이미 가시화한 금융 관련 정보기술의 발달은 위험의 평가 및 관리기법 등을 포함한 의사결정기법의 고도화를 촉진시키면서, 금융산업의 범세계적 통합과 금융업무의 증권화·겸업화 추세를 이끌어 가고 있다.

21세기 세계금융산업의 특징은 범세계화·증권화·겸업화

기술이 주도하는 국제금융환경은 금융기능 수행방식의 본질적인 변화를 초래하면서 21세기 세계금융산업의 성격을 크게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바꿀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금융거래비용의 획기적 저하에 따라 금융시장간의 상호연계성을 높이고 금융상품의 국제적 거래를 확대하는 금융의 범세계화(financial globalization)이다.

둘째는, 민간주체들의 자산조달·운용상 변화를 가져오는 금융의 증권화(securitization)이다.

셋째는, 異種金融機關間 업무영역의 상호진출폭을 확대해 가는 금융의 겸업화(universal banking)이다.

앞으로 전개될 이 같은 금융환경 변화는 금융산업내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은 물론 국경의 개념마저 희석시키는 혁신적인 것이므로 이를 뒤쫓아가기보다는 한발 앞서 대응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금융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

과거 20여년간의 금융환경변화는 금융의 국제화와 새로운 금융위험의 대두로 요약할 수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투자은행, 헤지펀드, 다국적기업과 국제금융재벌 등 새로운 참여자들의 역할이 증대된 가운데 국제간 자본흐름의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각종 위험요인도 새로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최근 전개되고 있는 세계금융질서의 재편 논의는 현 국가 위주의 금융체제하에서는 세계적인 금융체제의 안정성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상황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즉, 자유로운 자본흐름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 국가의 위험요인이 다른 국가로 파급되는 전염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금융질서의 회복노력이 G-7국가들을 중심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 국가간 협력강화와 새로운 금융질서를 위한 규범설정의 필요성은 투자가와 차입자들의 금융위험 및 보상에 관한 인식과 행동양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다. 국제금융환경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 금융산업의 재편과 통합을 들 수 있다.

지난 20년간 금융산업은 꾸준히 전세계적으로 변화해 왔고 90년대 들어 그 변화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데 첫째는, 전형적인 은행기관이 보다 공격적인 경영전략을 구사하는 새로운 금융기업으로 바뀌는 추세이다. 둘째는 비은행 금융기관 – 예를 들면, 뮤추얼펀드, 투자은행, 연기금 그리고 보험회사 – 들과 은행기관들 간의 치열한 경쟁을 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금융산업은 겸업화 추세에 따라 은행과 비은행 간의 구분이 점차로 모호하게 되어가는 경향을 띠고 있다.

둘째, 금융시장의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1970년대초 이래 급속한 정보기술의 발달로 금융혁신을 바탕으로 한 국제간 자본이동이 크게 늘어났다. 금융의 범세계화는 이러한 확대일로에 있는 국경간 자본이동의 중개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투자가들은 수많은 경쟁업자들로부터 저비용으로 일련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받고 이에 따라 보다 많은 투자기회를 향유하게 되었다.

셋째, 새로운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개발될 것이다.

금융기관들은 투자가들의 위험회피 경향을 감안하여 금융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각종 위험관리 방법을 도입 · 발전시키는 동시에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적극 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험관리 기법은 통합된 시장위험을 통제하고 분산시키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신흥 개도국의 금융시스템 건전화가 진전되고 단기투기자금 규제조치가 마련될 것이다.

최근까지 세계금융환경을 좌우했던 금융위기는 향후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확보와 기업의 투명한 회계기준, 효율적 파산절차 등 각종 기업재무관행의 개선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기 촉발의 한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투기적 단기자금에 대한 규제조치의 필요성도 점차 강조되고 있다.

> 21세기 세계금융산업은, 금융거래비용의 획기적 저하에 따라 금융시장간의 상호연계성을 높이고 금융상품의 국제적 거래를 확대하는 금융의 범세계화, 민간주체들의 자산조달 · 운용상 변화를 가져오는 금융의 증권화, 異種 금융기관간 업무영역의 상호진출 폭을 확대해 가는 금융의 겸업화라는 세 가지 특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달러화와 함께 세계 기축통화 위상 갖게 될 유로화

1999년 1월 4일 유로화가 전세계 금융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거래됨으로써 유럽경제통화동맹(EMU)시대가 개막되었다. 막대한 경제규모를 가진 유로랜드에서 단일통화로 사용하게 될 유로화는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화와 함께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화의 향후 위상은 유로화 사용지역의 경제규모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11개국 유로랜드의 GDP(97년 기준)는 6조3천억달러에 달해 세계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0%로 미국의 20.2%보다는 다소 낮지만 일본의 7.7%와 비교해서는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향후 영국 · 덴마크 · 스웨덴 · 그리스가 가맹할 경우 유로랜드는 세계 최대의 경제권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유럽통화가 지급수단으로서 차지하는 비중은 독일의 마르크화를 포함할 경우 약 33.5%로 미달러의 42%에는 미치지 못하나 일본엔화가 차지하는 12%보다는 현저히 높다. 더욱이 향후 영국이 EMU에 참여할 경우 그 비중은 훨씬 높아지게 되어 단순히 거래비중만 비교하더라도 유로화가 달러화에 필적하는 기축통화로 자리잡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무역결제통화로서 유로화의 역할을 전망

해 보기 위해 무역규모를 비교해 보면, 유로랜드의 무역규모는 세계 전체GDP의 36%를 차지하여 최대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특히 수출국가의 통화로 결제되는 관행을 감안하여 전세계 수출비중을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미국은 12.6%인 반면 유로랜드는 이보다 높은 15.7%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유로랜드의 무역결제자금이 유로화로 전환된다면 유로화의 향후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결국 유로랜드의 막대한 경제력과 무역규모는 유로화가 장기적으로 미달러와 경쟁할 수 있는 기축통화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전망에 타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유로화의 출범은 또한 포트폴리오 수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단일 거대자본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용된다면 민간자산 구성에서 달러화의 비중을 줄이고 유로화에 대한 수요를 확대할 것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즉, 투자가의 입장에서는 규제가 적고 다양한 금융상품이 있으며 유통시장이 잘 발달된 금융시장의 출현이 예견되고, 안정지향적인 경제정책으로 인플레의 염려도 적어 유로표시자산이 매력적인 가치저장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유럽지역의 금융기관들이 유로화 자산비중을 확대함에 따라 전세계 중앙은행들도 외환보유고에서 유로화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것 또한 유로화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같이 유로화의 위상이 제고되면서 세계금융시장은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우선 역내 금융시장의 통합에 따라 기업의 자금조달 기회가 다양해지면서 대출시장은 위축되는 반면 금융의 증권화 현상으로 채권 및 주식시장 등 직접금융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계 총 외환보유고의 69%, 은행대출의 70%, 채권발행의 40%가 달러로 표시되고 있으나 EMU의 출범으로 유로화는 조만간 세계 총 외환보유고의 약 30%, 은행대출의 30~35%의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특히 유로화 표시채권은 99년중 2조8천억달러에 달해 미국 재무성 증권시장 규모를 능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제자본시장은 미달러화 표시채권과 유로화 표시채권의 양대 체제로 구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로화 출범과 더불어 격변하는 국제금융환경하에서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의 구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아래와 같은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첫째, 개별국가의 금융안정성 제고노력이 크게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건전성규제의 강화는 물론 투명한 회계제도의 적용과 같이 국가단위의 대차대조표상 위험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노력을 포함한다.

둘째, 변동환율제도의 도입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기축통화국가의 화폐에 자국화폐를 연동시킴으로써 인플레를 관리할 수 있으나 금융정책상의 자율권을 상실하고 기축통화로의 화폐대체(currency substitution)를 가속시키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3대 기축통화와 마찬가지로 변동환율제도의 도입이 적절하나 뜻하지 않은 자본유출입은 관련국가 환율의 급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국제금융질서의 유지와 관련하여 국제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과거 IMF 처방은 공격받는 화폐에 대한 신뢰도 회복에 초점을 두었으나 초긴축정책의 피해는 궁극적으로 신뢰도 회복에 장애요인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단기자본 유입에 따른 피해 최소화하고 금융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이미 우리나라는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환율절하압력의 누적에서 오는 외환위기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 상황

이다. 다만 전술한 국제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나가려면 우선 단기자본의 유입규제, 자본조달의 다양화, 위험관리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단 실질환율의 급격한 절상으로 경제안정기조를 해칠 수 있는 단기자본유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가변지준제(VDR)를 통해 급작스런 자본유입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 단기외화부채 상황에 유의하면서 가급적 자본시장과 직접투자를 통한 자본조달에 비중을 둬야 할 것이다. 특히 통화당국은 공적 외환보유고 포트폴리오에서 유로화가 차지하는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본다. 또한 국가차원에서 대차대조표상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함으로써 자유로운 자본흐름으로 증폭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도 있다.

이상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전략과 더불어 이제는 금융기능의 조기정상화를 꾀하는, 금융구조조정의 차원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여야 한다. 앞으로의 금융환경은 단순히 우리가 보호적인 입장에서 대응한다기보다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제조업 위주의 성장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현 상황에서 금융산업은 21세기 성장주도의 전략산업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금융산업이야말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잠재력이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선진화된 금융산업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신용배분을 통한 경제구조의 선진화가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금융산업은 향후 유망 투자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실물부문의 회복을 선도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선진금융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자율적 구조조정 노력과 함께 금융기관의 업무를 혁신하고 능력을 배양하며 정보화를 추진하는 등 경영효율성을 크게 높여야 한다.

셋째, 금융산업의 경쟁력제고는 우수한 금융인재에 의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 관련 인재(gold collar) 양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정책상의 배려가 중요하다.

넷째, 경제운용의 패러다임이 기업과 금융기관을 투명한 기준에 의해 평가하는 시장규율의 정착에 비중을 두는 만큼 각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은 스스로의 경쟁력을 생존의 필수조건으로 인식해야 한다. 특히 도덕적 해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각종 유인부합적(incentive-compatible) 대책을 마련하여 자발적인 책임경영노력을 제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금융환경의 변화로 금리 · 환율 등 시장가격변수의 변동성은 높아졌다. 따라서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각종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위험관리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금융산업은 금융기관간 업무영역의 확대로 리스크의 공동화 현상이 크게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즉, 금융기관이 고유리스크를 담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공동화된 리스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폭은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기법도 과거 고유리스크관리에 국한되었던 것으로부터 공동화된 타금융부문의 리스크까지 포괄하는, VaR(Value at Risk) Limit와 같은 진보적이고 포괄적 위험관리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히 요구된다.

환율절하 압력의 누적에서 오는 외환위기 가능성은 크게 낮지만 가변지준제를 통해 급작스런 단기자본 유입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유망 투자산업을 적극 발굴하여 실물부문의 회복을 선도하게 하고 금융기관의 경영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한편 금융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인력정책상 배려가 있어야 한다.

〈표〉 금융경제환경의 변화 전망

기 간	1996~2000년	2001~2010년	2011~2020년
거시경제	• 1인당 국민총생산 20,000 달러 육박	• 10대 경제선진국	• 7대 경제선진국
금융의 국제화	• 외환 및 자본거래, 금융서비스의 단계적 자유화 • OECD 가입 • 국내외 금융시장간 연계성 증가	• 외환 · 자본자유화 완료 • 금융의 국제화 · 현지화 완료 • 원화의 국제화 진전	• 범세계적인 금융거래의 보편화 • 원화의 국제화 완료 및 범세계적 금융센터로서의 위치 확보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 금리자유화의 완결 및 금융상품개발 관련 규제의 대폭 완화 •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규제 완화 • 파생금융상품시장의 정비 • 직접금융시장 대폭 성장 • 금융기관의 대형화 및 전문화 • 개인 및 기업의 신용정보 시스템 완비 • 금융기관의 위험관리능력 향상 • 경제의 서비스화에 따른 서비스 관련 금융수요 증가	• 주문형 종합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위험분석 및 관리체계 구축 • 금융기관의 종합금융화에 따른 통폐합 및 분할 • 각종 위험분석 및 관리체계 확충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금융조직의 분권화 및 통제력 강화 • 월경금융거래 보편화 및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체제 · 조직 변화 • 인구노령화에 따라 개인 및 기업연금시장 확대 • 투자정보기관의 발달과 전문가집단의 출현	• 금융과 산업의 균형적 발전 • 가상점포의 보편화와 금융조직의 수평화 • 전자유통경로를 통한 첨단 금융서비스 제공 • 정보산업전문인력(gold collar)의 중심적 역할
금융기능 수행방식	• 결제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전자데이터교환(EDI)의 추진 • 멀티미디어의 보급과 금융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다운사이징 • 금융거래비용의 감소 및 자금중개기능 효율화 • 가상금융업(virtual banking)의 활성화 • 위험의 평가 및 분산 기법의 발달 • 전자화폐의 출현 및 인터넷 전자지급결제 시스템의 활용	• 부계정(wealth account)과 소립자재무이론(particle finance)의 결합에 기초한 자금운용기법의 첨단화 • EDI의 보편화와 전자금융의 첨단화 • 소비자의 위험선호도에 따른 금융상품의 주문 생산 및 다양한 지급결제제도의 완비 • 초고속 정보통신망(ISH) 활용을 통한 금융정보 창출	• 금융의 첨단정보화 • 재정거래를 위해 자동화된 분석방법을 적극 활용 •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금융정보네트워크(FINS) 완비 • 전자게시판을 이용한 범세계적 금융거래의 보편화
통화신용 정책 및 감독	• 통화조절수단의 정비 • 건전성 규제 · 감독방식의 강화 • 겸업화추세에 대응하여 감독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 범세계적 금융에 상응하는 체계적인 위험관리체제의 정비 •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 · 감독의 지속적 개선	• 다국적 포트폴리오에 자동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즉각적인 위험평가

세계무역환경의 변화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현재 WTO에서는 21세기 세계교역질서를 관장할 새로운 무역규범의 구축을 위한 뉴라운드 개시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중이다. 일명 '밀레니엄 라운드(Millennium Round)'로 명명되기도 하는 뉴라운드는 아직 그 구체적인 협상의 방식이나 범위 및 시한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99년 하반기(11.30~12.3)에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될 제3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일반이사회의 검토 결과에 따라 그와 관련된 모든 세부사항들이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21세기 세계무역환경에 엄청난 변화 부를 '밀레니엄 라운드'

현재로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따라 농산물 협상은 99년말경 그리고 서비스 협상은 2000년초에 각각 개시될 것이라는 점이 확실시되는 반면, 뉴라운드의 추진방식은 부문별 협상방식이 될지, 포괄적 협상방식이 될지 또한 어떠한 분야가 협상대상으로 포함될지 모두 미정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국제 논의 동향을 분석해 볼 때, 뉴라운드는 포괄적 일괄타결 방식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협상대상 분야로는 농산물 및 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상의 내장된 의제(BIA;Built-In-Agenda)에 공산품 관세인하와 환경 · 투자 · 경쟁정책 · 정부조달 · 전자상거래 등의 새로운 통상이슈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뉴라운드가 추진될 경우 그 범위와 규모 그리고 대상분야의 성격 등을 감안할 때, 21세기 세계무역환경은 다시 한번 엄청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시장접근뿐만 아니라 무역에 영향을 주는 각종 국내제도 및 관행에 대한 국제규범이 제정될 경우 이는 세계경제질서의 대변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21세기의 세계교역 패턴은 물론이고 각국의 산업구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새로운 통상이슈로 WTO 차원에서의 규범화가 논의되고 있는 분야는 비록 환경,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 투명성 제고, 전자상거래 등이지만 앞으로는 규제개혁, 기업지배구조, 노동조건, 기술 등 다양한 이슈가 새로운 통상이슈로 부상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이 통상이슈의 범위가 확대되어 감에 따라, 국가간의 통상마찰도 그의 유형 및 범위에 있어서 훨씬 다양하고 폭넓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WTO 체제하에서의 무역분쟁 건수가 GATT 체제에 비해 연평균 6~7배 증가한 주된 이유는 WTO 체제가 과거의 체제가 포괄하지 못했던 농산물, 섬유, 무역 관련 투자조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서비스 등 당시의 새로운 분야를 포괄함으로써 국가간의 분쟁 가능한 분야가 그만큼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뉴라운드의 결과로 새로운 이슈들이 대폭 국

제규범화될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국가간의 통상마찰 역시 현저히 증가할 것이다. 특히, 앞으로 국제규범화될 새로운 이슈들은 그의 성격상 명확한 국제규범의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려운 국내제도와 관행 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현상이 가속화될 2000년대에는 불가피하게 국가간의 통상마찰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중국의 WTO 가입도 세계무역판도를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중국이 인도와 함께 개도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치를 굳힐 경우 선진국 · 개도국간의 마찰은 물론이고 세계경제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미국 · 중국 · EU · 일본 간의 통상마찰도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OECD가 2000년대의 빅5로 지목한 바 있는 중국 · 인도 · 인도네시아 · 러시아 · 브라질 등 거대 개도국들의 부상도 각국의 국내제도의 투명성 보장, 사양산업 보호, 첨단산업 육성 등을 둘러싸고 국가간의 통상마찰을 현저하게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한편, 2000년대에는 양자간 또는 지역차원의 지역협정이 크게 증가하고 그들간의 상호연계에 따라 세계무역질서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EU는 이미 단일통화를 출범시키고 중 · 동구 유럽국가들을 역내로 편입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는바, 유럽전역의 결속강화를 통해 2000년대 초반에는 명실상부한 단일유럽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주지역에서는 북미의 NAFTA 및 남미의 MERCOSUR를 중심으로 동 지역내에 산재하고 있는 소지역협정을 하나로 묶는 범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창설을 2005년까지 완성시킬 계획으로 그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중이다. 미행정부의 신속승인처리권한이 확보될 경우, FTAA의 출범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NAFTA에 의한 자유무역계획이 완료되는 2009년경에는 미주와 EU를 단일시장으로 묶는 대륙간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에 관한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에서도 ASEAN 자유무역지대(AFTA)가 형성되고 회원국의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바, 2003년 AFTA의 실현이 예정대로 완료될 경우, ASEM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와 유럽 간의 경제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도 큰 진전을 보일 전망이다. 이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의 추세를 분석해 볼 때, 현재에는 지역무역협정이 양자간 또는 지역적 차원의 소규모 형태에서 확산 · 심화되는 추세에 있으나, 2000년대에는 소지역협정 또는 대륙간 지역협정간의 통합을 통한 거대 지역협정들이 탄생될 전망이다.

국가간 통상마찰 증가할 2000년대 맞을 철저한 대비책 마련해야

이와 같이 2000년대에는 세계무역질서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우리 경제가 그와 같은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는 제반요소를 심층적으로 연구 · 분석하여 그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경제질서 형성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국제무역의 현안으로 부상되고 있는 새로운 이슈에 대한 논의에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참여해야 한다. 즉, 각종 관련위원회 및 작업반의 논의나 연구 등에 민간전문가를 대폭 참여시켜 규범제정을 위한 협상에 임하기 전에 각국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논리를 개발하고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통해 전반적인 국가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시장경제

체제란 가능한 한 행정규제를 지양하고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이 자율적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체제를 의미한다. 그와 같은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대내적으로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외적으로는 무역자유화의 확대추진을 통해 내외국기업이 어디에서나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앞으로의 국제 규범화는 주로 국내제도 및 관행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분야로 발전되어 갈 것이다. 실질적인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매사에 통상마찰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국가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을 약하시키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모든 국가와의 양자관계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미국 · 일본 · EU 등 전통적인 주요 교역시장에 대해서는 지나친 수출확대 전략보다는 안정된 통상기반의 구축과 효과적 시장관리에 중점을 두고, 중국 · 인도 · 동남아 · 중남미 및 동구 국가 등 성장잠재력이 큰 개도국에 대해서는 경제개발계획에 참여하는 등 보다 긴밀한 경제협력을 통한 시장진출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국가 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전략적 제휴를 위한 민 · 관 공조체제와 업계간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다양한 전략이 구사되어야 한다.

넷째, WTO 분쟁해결절차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각종 새로운 통상이슈의 성격을 고려할 때, 국가간의 통상마찰 발생빈도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그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통상마찰이 발생할 경우, 그들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자협의를 통해 우리의 제도와 관행의 개선의지 및 일정을 명확하게 밝히고,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WTO에 제소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우리의 주장에 대해서는 항상 명확한 법적 논리는 물론이고 가능한 한 경제학적 또는 계량적 검증을 통한 입증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주의의 확산 및 심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모든 지역무역협정의 역외국으로서 폐쇄적 지역주의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주의의 배타성을 견제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우선,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에서 현행 지역무역협정의 문제점을 적시하는 한편,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다자체제를 보완하는 지역무역협정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그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나라도 기존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거나 특정 국가와의 쌍무적 FTA를 체결함으로써 우리의 국익을 도모하면서 여타 지역무역협정의 배타성을 견제하는 전략도 구사할 필요가 있다.

>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될 2000년대에는 불가피하게 국가간 통상마찰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양자간 또는 지역차원의 지역협정이 크게 증가하고 그들간의 상호연계에 따라 세계무역질서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될 것이다. 세계경제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美 · EU 등 강대국들간의 통상마찰도 더욱 심화될 것이다.

21세기의 세계경제는 자본과 생산의 글로벌화, 지역통합의 확대, 정보 및 물류혁명 등으로 더욱 급속히 단일경제권으로 통합되어 갈 것이다. 모든 기업이 국경에 관계없이 각 생산요소를 최적 결합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고 생산 · 판매하는 등 그야말로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드는 것이다. 세계경제가 통합되어가면서 폐쇄적이거나 경쟁력이 약한 국가는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우리는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글로벌시대의 기업경쟁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지난 2월초에 있었던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의 주제는 '책임있는 세계화(responsible globality)'였다. 매년 이 회의에 참석해 오고 있는 필자로서는 이제 세계화(globalization)가 현상의 차원을 넘어 인류가 지향해야 할 하나의 가치로 진전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처럼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본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화는 이미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의 필요조건

이념을 전제로 한 냉전체제의 붕괴 이후,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핵심요소가 國富라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불과 수년전만 하더라도 한국의 경제성장을 두고 많은 외국언론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경제성장의 표본으로서 한국경제를 배우려는 발길이 이어졌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6·25 이후 최대의 국난에 직면하여 총체적 법정관리의 나락을 헤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의 근본적 책임을 어느 한 경제주체에만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다. 정부는 관치금융과 외환위기관리 실패 등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기업은 외형확대 위주의 차입경영에 따른 부실화 책임, 정치권은 금융 및 노동시장 개혁 입법 실기의 책임 그리고 국민은 건전한 소비자와 근로자로서의 책임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면 현재의 위기를 탈피하고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한 나라의 경제력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기업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업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의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기업경쟁력이란 명제는 곧 국가의 생존전략을 의미한다. 기업을 국가경제의 중심으로 인정하고 육성시키려는 각 경제주체의 중지가 모아져야 한다. 이를 위한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우선돼야 함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우선 경쟁력 창출의 주역으로서,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이제 글로벌 시대에 우리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급변하는 경제상황을 예측하는 비전경영(vision management)을 해야 할 것이다. 미래의 생존을 위해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며, 모든 구성원의 상상력과 창조력을 결집하여 환경에 대응하고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에너지를 한 방향으로 일체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절대적으로 수익성 위주의 경영패러다임을 구축할 때이다. 대량생산·대량판매에 의한 양의 시대는 지나갔다. 따라서 경영의 모든 면에서 외형보다는 수익성이 중시되어야 하고 생산자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셋째, 신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지난 1월『파이낸셜타임즈』

는 미국의 최대소프트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전세계 기업 중 가장 경영혁신을 잘하는 기업으로 선정하였다. 2위인 제너럴 일렉트릭(GE)보다 3배 이상 높은 점수를 주었다. 이는 MS의 신기술에 대한 투자확대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결과이다.

넷째, 기업가적 역동성을 극대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업가적 역동성을 보유한 기업은 경쟁력을 유발하는 지식자산을 부단히 찾아내고 이를 활용한다. 이들 기업은 경영의 투명성, 고차원의 능력제, 권한의 대폭 이양, 과감한 혁신 투자 등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

'고비용-저효율' 구조 개혁으로 기업경쟁력 기반 다져야

경쟁력 창출의 지원자로서,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추스려야 한다. 아직도 우리 산업의 근간은 제조업이다. 우리 산업의 질적 구조는 부품 · 소재 · 자본재산업의 낙후로 대외환경 변화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첨단기술산업 등 미래 산업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이 튼튼하지 못한 실정이다. 산업구조는 급변하고 있으나 대외의존적 산업체질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최근 일본이 제조업부문의 경쟁력강화를 중시하고 그 추진주체로서 민관협력 및 역할분담의 협의를 위한 민관공동의 '산업경쟁력회의' 창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고규제 · 고금리 · 고임금 · 고지가 · 고물류비 등 소위 5高 즉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간 전경련을 중심으로 운영해 온 '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에서 누차에 걸쳐 지적한 바 있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의 현 경제위기는 본질적으로 5高 비용구조에 기인한 것이다. 정부규제 · 금리 · 임금 · 지가 · 물류비용 등의 생산요소 비용이 미 · 일 등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 후진국보다 더 높았으니, 이러한 '고비용-저효율' 속에서 어떻게 우리 경제가 기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겠는가.

최근에 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주요 요소비용은 해외현지공장 사례에 비해 금리 1.5배, 임금 2.3배, 공단분양가 5.5배, 매출액 대비 물류비 2.0배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장설립 관련 인허가서류도 3.4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와 해외현지공장과의 격차가 가장 큰 사례를 살펴보면, 각 요소비용별로 작게는 3.3배에서 무려 250배나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영환경은 기업이 생산활동을 함에 있어서 시작단계에서부터 생산단가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비용구조는 기술개발 단가도 상승시킨다. 경쟁국과 같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금리차이로 인한 금융비용의 부담격차 때문에 우리 업체의 실질적인 기술개발 비용은 더 들게 된다. 축적된 기술이 부족하여 갑자기 품질을 높일 수도 없고, 금융비용 등의 부담 때문에 기술개발을 새로 하기도 어렵다.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인한 경쟁력 약화는 결국 우리 경제를 위기상황으로 끌어들였다. 이제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근본적 개혁을 더 이상 지체한다면 경제위기의 극복은 요원할 것이다.

셋째, 최소한 단기적으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구조조정에서 수출확대로 전환시켜

> 기업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이다. 글로벌시대에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급변하는 경제상황을 예측하는 '비전경영'을 해야 하고 절대적으로 수익성 위주의 경영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경쟁력 창출의 지원자로서 정부는 '고비용-저효율' 구조 개혁에 주력하고 단기적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추스르는 한편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구조조정에서 수출확대로 전환해야 한다.

야 한다. 수출은 외환위기와 고용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이다. 현재의 경제위기도 결국은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기대 이상으로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기업부도가 감소하고 있고 실업증가 추세도 주춤하고 있으며 대외신인도도 크게 회복되어 무디스, S&P 등 해외 신용평가기관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였다.

절체절명의 외환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우리 경제가 그나마 회복의 길로 접어든 것은 수출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우리 수출은 심각한 금융경색과 주요 수출시장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善戰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가공산업국가의 숙명을 지니고 있다. 인도네시아나 러시아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지만 우리 경제는 수출이 아니면 생존할 수 없다. 따라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도 이제는 수출확대에 두어져야 한다.

넷째, IMF 관리체제라는 눈앞의 위기극복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산업구조 전환에 힘을 모아가야 할 때다. 21세기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지식기반산업의 발전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重厚長大型 위주의 산업구조만으로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으며 생산성 부가가치 위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지 않고서는 세계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특정산업을 육성하는 전통적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 교육 및 연구개발 시스템 등 전 분야에서 총체적으로 기능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선진국은 국가가 기초기술을 생산하고 기업은 이를 응용하는 기술생산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 정부는 기업이 개발하기 어려운 기초기술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디자인과 같은 비가격 경쟁력 부문의 제고에도 더 한층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오늘날 산업디자인은 투자효과면에서 경제적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쟁력 창출의 동반자로서,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민은 소비자이자 근로자로서 기업 경쟁력의 원형질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기업은 국민경제와 국가생존의 차원에서 국부증진의 중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국민들로부터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일본에서의 기업의 위치는 어떠한가? 기업과 기업인의 역할은 충분히 인정받고 존경받는다.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해 가고 기업이 강한 경쟁력을 갖게 된 데는 사회전체가 기업중심으로 움직여 간다는 사실이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소액주주운동도 좋고 사외이사도 좋지만 모두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해야지, 제살 깍아먹기로 기업기밀이 누설되고 기업이미지가 추락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업들은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와 약속한 구조조정 5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상을 확립하기 위해 전경련을 중심으로 경제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착실히 실천해 가고 있다. 이미 기업구조개혁을 위한 기본 시스템이 확립되었으므로 머지않아 그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것이다.

기업경쟁력이 약한 나라는 국가의 존립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가 쇠퇴일로를 걷게 된 근본 원인 중의 하나가 '제대로 된 기업'이 없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시대에 세계시장을 무대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기업 대표선수를 키우는 데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기업과 기업인의 사기를 북돋울 때이다.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

양영식
통일연구원 원장

21세기에는 분명 '한민족의 통일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아마도 이를 의심하거나 포기하는 한민족 구성원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형태와 방법으로, 어느 특정 시기에 '1민족 1체제 1국가 1정부'의 완전통일이 실현될 것인가는 그 누구도 단언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평화공존과 화해·협력 없이는 평화적 통일과 민주적 통일이 불가능·불가시적이라는 데에는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참다운 「국민의 정부」를 자임하는 김대중 정부는 21세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국가적 개혁과제와 함께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21세기에는 열릴 '한민족의 통일시대'

김대중 정부 통일정책론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특정의 정치적 통일방안이나 '통일정책'의 천명을 유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정부」는 '통일정책' 대신에 '대북정책'이라는 제한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정부」가 '통일헌법'이나 또는 민주선거에 의한 궁극적 체제통일안을 일단 장기 과제로 넘기고 평화공존·평화교류의 실현을 당면목표로 설정,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 기반 조성에 주력해 나갈 것임을 예견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주총선거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정치적 통일' 실현보다는 과도통일체제인 '남북연합' 단계의 진입을 임기중 최대 목표로 삼고 實事求是的 '대북정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통일의 집 설계도를 놓고 볼 때, 평화공존의 주춧돌과 교류협력의 기둥을 세우는 데 역점을 두어야지 체제통일의 지붕까지 올리려는 조급성과 과욕의 우를 범하지 말자는 입장인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포용정책(대표적 공식 명칭)·화해협력정책·평화공존정책(내용면)·햇볕정책(구호적 별칭)으로 설명되고 있다. 과거의 정부가 화해협력정책을 표방하면서도 은밀히 급변사태 대비계획 즉, 사실상 흡수통일정책의 아류로 해석될 소지가 농후한 위기관리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사실이 인지됨으로써, 더우기 전자보다는 후자에 더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으로써 마치 표리부동한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비판을 받은 점을 감안, 김대중 정부는 출범후 흡수통일 배제를 대북정책의 원칙으로 천명, 언행일치의 대북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전개해 왔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안보와 협력을 병행하여 추진한다는 점에서 현실주의적 정책이라 할 만하다. 그리고 대북지원과 경협에 있어서도 정경분리원칙과 신축적 상호주의원칙을 양대 축으로 삼고 있

21세기에는 분명 '한민족의 통일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형태와 방법으로, 어느 특정 시기에 '1민족 1체제 1국가 1정부'의 완전통일이 실현될 것인가는 그 누구도 단언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평화공존과 화해·협력 없이는 평화적 통일과 민주적 통일은 불가능하다.

다는 점에서 '대북정책'은 균형감각을 갖춘 신축성 있는 유연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동구 및 소련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로 세계적 차원에서는 냉전구조의 해체가 시작되었지만, 한반도에서는 아직도 냉전구조의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다. 다행히 「국민의 정부」 출범 1주년에 즈음하여 평가해 볼 때, 그동안 국내적으로 해묵은 保革 갈등의 정치적 토양과 얽힌 '햇볕론'과 '냉풍·강풍론'의 갈등·시비도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의 추진과 금강산 관광의 실현 등으로 일단 진정됨으로써 대북정책에도 봄기운이 감돌고 있다.

이제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포괄적·단계적 대전략 구상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21세기 한민족의 평화통일시대를 기약하는 평화정책으로서 온 국민과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냉전구조의 근본적 해체가 21세기 통일시대의 전제조건

남북관계에 있어서, 지난 한 해는 문자 그대로 긍정과 부정이 교차된 해였다. 한편으로는 북한의 잠수정 침투사건, 금창리 지하 핵의혹시설 문제, 미사일 시험발사와 개발 문제, '강성대국론'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비상위기관리체제의 지속 등으로 긴장요인이 이어졌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통일소떼의 행렬이 유유히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행하였고 금강산관광·금강산 개발의 뱃길도 뚫리는가 하면, 시장경제적 요소를 담은 북한의 헌법 수정, 4자회담의 진전, 조건부 '남북당국간 고위급 정치회담'의 제의, UNC-북한간 장성급회담의 재개 등 새로운 순풍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새해 들어 북한의 금창리 지하의혹시설문제와 미사일문제는 3월·5월 위기설로 번지기도 했으나, 협상타결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한·미 양국의 공동대응전략 관련, 일련의 정책협의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先확인 後조치' 원칙하에 포괄적·단계적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대북전략구상에 대해 내외의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2월 9일 日本『東京新聞』과의 회견에서도 미·북한의 관계개선과 관련하여 일괄타결 구상을 제의한 바 있다. 김대통령은 북한문제 일괄타결안에 대해 "북한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야 한다. 북한에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경제협력, 안전보장을 해주는 대신 북한으로부터 핵·미사일 개발중지와 한반도에서 무력도발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약속 등을 얻어야 한다"라고 설명하였다.

기실 한반도 냉전구조의 근본적 해체 없이는 제2, 제3의 금창리 의혹문제가 계속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이 어렵다는 점에서 21세기의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당면 최대 과제는 필경 '대북정책'과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성공적 추진과 직결되어 있다.

유럽의 냉전구조 해체로 형성되고 있는 탈냉전의 21세기 국제질서는 '열린 세계화', 무한경쟁·국가실리의 추구 속에 국가간의 상호의존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와 역행하고 있는 한반도의 냉전구조가 지속되는 한, 이는 한민족의 통일을 향한 발걸음에 족쇄로 작용할 것임은 재언의 여지가 없다. 대

결과 단절의 냉전구조는 군비경쟁과 불신 · 불안의 증폭과 민족역량의 소모를 가져올 뿐이다. 이의 해소 없이 남한의 IMF 체제와 北의 모라토리엄 조기 극복과 경제강국에로의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민족자해적인 냉전대결구조를 민족자애적 평화공존구조로 전환하는 일이야말로 남과 북 모두에게 민족사가 요청하고 있는 시대적 사명이라 할 것이다.

튼튼한 안보태세를 기반으로 북한과의 화해 · 협력 추진

21세기 평화 · 통일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많은 과제들 가운데 정부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다섯 가지 과제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무엇보다도 먼저 튼튼한 안보태세의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대북원칙'의 제1원칙(무력도발 불용납)은 결코 상징적 강조어가 아님을 행동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이는 필경 북한의 도발의지를 무산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태세에 대한 일말의 국민적 불안감과 우려를 말끔히 불식시키는 처방책이 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올해 첫 국가안전보장회의(1999.1.4)에서 '안보 3대원칙'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증진, 남북간 화해협력의 지속적 추구, 안보 및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공조관계의 강화를 제시한 바 있다. '안보 3대원칙'은 안전보장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가운데 대화를 통해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병행 ·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둘째,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대전략 구상을 구체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는 북한의 체제생존을 보장하는 한편,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대립구조를 평화구조로 전환시킴으로써 한반도 전쟁 재발 위험을 근본적으로 막고 남북한 공존과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을 이미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긴밀한 한 · 미 · 일 공조하에 정전체제의 남북평화체제로의 전환과 국제적 보장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동북아 지역집단안보체제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우리 사회 내부에 상존하고 있는 냉전적 사고와 관행의 청산 및 냉전적 법 · 제도의 개폐 등도 과감히 그러나 용이주도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필경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는 사회 · 국가 · 국제적 차원에서 대결구조를 협력 및 상호의존관계로 변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적대적 대립과 이질화로부터 상호이해와 동질화로의 변화를, 국가적 차원에서는 이념적 · 정치적 · 군사적 대결로부터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으로의 변화를, 국제적 차원에서는 양자 동맹관계의 진영적 대결로부터 다자간 지역안보 협력체제에 의한 상호 의존 · 협력 관계로의 변환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정경분리원칙과 신축적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그리고 남북한 평화공존 · 화해협력과 북한의 변화촉진이라는 장기적 전략구도에 따라 신축적인 남북대화 · 교류협력을 가속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先民間 後當局', '半官半民', '當局間' 협력 방식 등 가용한 다변적 방법(단계적 · 병행적 또는 선민간 후당국 등)을 유효적절하게 전개해 나가야 한다. 특히 통일소떼의 북행길, 금강산 뱃길의 물꼬를 튼 일 등을 계기로 1985년 경제회담에서 사실상 원칙적 의견접근을 본 경의선 철도길(필자註:1984년 수재물자 인도 · 인수시에는 북평항, 인천항과 북한항구의 항로연결이 있었음)도 연결해 나가도록 남북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물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의 국제항공기구들과 연계하에 남북영공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바탕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주변국가들과 함께 우리는 멀지 않은 장래에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필경 민족자애와 민족친화력을 소생시켜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남북한의 이질화를 극복하게 함으로써 민족공동체 의식을 샘솟게 하는 통일동력을 우리 민족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의 하늘길도 열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남북공동어로 분야를 비롯, 관광분야 · 농협분야 · 경협분야 공동협력방안 등을 추진해 나가되 문화 · 체육분야, 정치인 접촉에 이르기까지 다각적 접촉 · 교류의 촉진을 위한 대북협상을 적극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질적 이행과 직결되는 과제임은 재언의 필요가 없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은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협력사업으로서 남북관계에 있어 커다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정경분리원칙'이 큰 열매를 맺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금강산 관광사업의 안정적 추진은 남북간의 일상적 접촉과 함께 점차 인적 왕래의 증대를 낳을 수밖에 없으며, 다각적인 남북간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에서 평화분위기를 조성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북으로 향한 잦은 발걸음이 필경 21세기초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의 첩경으로 들어서는 역사적인 행보가 될 것이다.

넷째, 정부는 남북대화는 물론 '南南對話'의 광장을 넓혀나가야 한다. 이는 정부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논의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국회와 민주평통을 비롯, 민화협과 민간 통일문제연구협의회 및 대학통일문제연구소 등이 주도하는 '통일대화의 광장'(세미나, 통일공청회와 청문회)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분단 이후 출생자가 남과 북의 전체 인구 중 각각 83%와 87%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컴퓨터 세대 · 사이버 세대인 신세대들을 대상으로 '생활 속의 통일논의'(예:통일문제 전자공청회, 인터넷 홈페이지 통일장 설치 등)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대화의 場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평화공존과 다각적 교류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이룩한 서독의 교훈을 되새겨 대한민국을 더욱 매력 있는 자유민주체제로 다져 나가는 일에 정부와 국민이 함께 진력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는 대북정책의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한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방안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민족구성원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는 자유민주체제의 磁力이다. 남과 북 어느 쪽이 보다 더 민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족통일의 주도권을 부여받느냐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남과 북의 민족구성원이 내린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튼튼하고 건강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바탕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주변국가들과 함께 우리는 멀지 않은 장래에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필경 민족자애와 민족친화력을 소생시켜 민족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남북한의 이질화를 극복하게 함으로써 민족공동체 의식을 샘솟게 하는 통일동력을 우리 민족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냉전구조의 근본적 해체야말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세대가 짊어져야 할 명예로운 짐이요, 동시에 확실한 통일준비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질서 주도할 환경문제

이상은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원장

인류의 역사를 몇 십만년으로 보고 있지만 새로운 천년을 맞는 행운을 누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으며 특히 문명사회라 할 수 있는 지난 수천년 동안은 불과 몇 번의 기회가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21세기를 맞이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앞으로의 천년을 살아갈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지구를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환경조건은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물이 오염되어 색깔이 변하고 고기가 죽으며 악취가 나는 등 오늘날의 적조 현상과 같은 기록이 나오고 약 2,500년 전에 로마에 건설된 Clocae Maxima에서 최초의 계획된 하수관거의 흔적을 찾을 수 있어 환경오염의 역사도 꽤 오래된 것 같다. 그러나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자연에 본격적인 변화를 주고 환경을 파괴하기 시작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이다.

특히 백년 전의 전세계 연간 총생산량이 오늘날에는 불과 10여일의 생산량에 불과할 정도로 급속한 변화와 성장을 이룩한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가 자연환경에 미친 영향은 엄청나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되어서는 우리 삶의 터전이며 하나뿐인 지구를 지킬 수 없게 될 정도가 되었다.

따라서 냉전시대가 종식된 이후 오랜 기간 세계질서를 주도해 왔던 군사력의 역할이 감소되면서 앞으로의 세계질서는 환경문제가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200개에 가까운 환경 관련 각종 국제협약들로서 현실화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무역에 제재를 받게 되고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고 만다.

결국 이제 막 경제발전을 위해 발돋움하려 하는 개발도상국들도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만 할 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환경문제의 해결과 함께 지구 전체의 환경문제의 해결에 동참해야만 21세기에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1세기 국제사회 현안과제로 떠오르는 지구환경 문제

세계 인구의 증가와 과도한 개발 그리고 자연자원의 남용은 지구생태계의 자정과 치유능력을 초과하는 환경오염과 파괴를 초래하여, 인류를 포함하는 자연생태계 구성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에 와 있다.

특히 도시화 · 산업화 · 국제교역의 확대를 주축으로 하는 인류 경제활동의 증가는 지구온난화, 수자원의 고갈과 적조발생, 열대삼림 파괴, 사막화 가속, 생물종 감소 등 지구생태계 차원의 총체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지구환경 문제는 이와

97년 일본 교토 제3차 총회에서 채택한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98년 11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제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

같은 국지적 또는 전지구적 환경오염행위, 그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문제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지구환경 문제는 우선 환경보전 역량 및 경제성장 단계에 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격차에 관련된 남북문제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 차이를 들 수 있다.

지구환경문제의 또 다른 특성은 그것이 국지적인 문제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CFC 배출에 따른 오존층 파괴의 파급효과, 월경성 산성비 및 하천오염 피해의 확산, 유해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에 따른 환경문제의 이전 등에서 보듯이 오늘날 환경문제의 대부분이 비록 그 원인발생은 국지적인 문제라고 할지라도 지구생태계의 유기성, 국제교류의 심화 등을 통해 전 지구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구환경문제가 어느 한 시기 또는 한 세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는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100여년 이상을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현세대의 오염물질 배출행위에 대한 대가를 후세대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세대간 형평성에 관련된 지구환경문제의 특성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비단 지구온난화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체르노빌에서 있었던 원전사고의 사후처리 과정을 통해서 명백히 드러난 바 있다.

이렇게 지구환경문제가 남북문제일 뿐만 아니라 범지구차원의 문제이며 세대간 형평성에 관한 문제라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지구적인 차원의 공동대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결국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경제성장 욕구, 오염자와 피해자의 괴리, 환경보전에 대한 가치평가 등에 관련된 국가간 그리고 세대간의 이해관계 대립을 해결하고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공동대처의 결실을 맺을 것인가 하는 일이 21세기를 목전에 둔 국제사회의 현안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987년 유엔총회의 결의로 채택된 「2000

년대를 향한 환경전망」과 1992년 「리우선언문」에서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이념의 도입은 국가 또는 국제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개발 및 환경보전 노력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한 바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법의 모색에 있어서는 여전히 국가를 비롯한 주요 이익집단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절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 점은 기후변화 등과 관련된 여러 국제협약의 채택과 추진과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화 · 생물다양성 문제가 주요 이슈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1992년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1997년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여 선진국과 시장경제 이행국들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다수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률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growth target)를 허용하는 형태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안과 청정개발체제를 통한 선진국의 對개도국 지원 등 다양한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산업화 과정에서 대기 중 온실가스를 누적시켜온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과 개도국경제의 지속성장 필요성 문제로 인해 개도국 감축의무 부담과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 안건에 대한 구체적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지만, 이는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선 · 개도국간의 형평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잘 드러내는 실례가 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기후변화협약보다도 더 막대한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지구환경문제는 생물다양성 문제라고 주장한다. 조사된 바에 의하면, 향후 20~30년 내에 지구 전체 생물종의 약 4분의 1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체결을 통해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권리의 인정, 국별 생물상 조사 및 목록작성 등에 관한 통일된 규정을 정립하였고, 1999년에 '생명공학 안정성 의정서'의 채택을 통해 생명공학기술 · 산업과 연계된 지적소유권 및 생물자원의 소유권 보호에 관한 세부규칙을 규정할 전망이다.

지구환경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파악된 생물다양성협약은 21세기 지구환경 문제해결에 관한 논의의 중심이 인류생활에 쾌적한 생활터전을 보전한다는 환경적 관심보다는 그 내부에 숨겨진 경제적 이윤 동기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나갈 것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지구환경문제의 이러한 측면은 가입국에 대한 유해폐기물 발생 최소화와 적정관리의무 등을 규정하는 한편,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시 정해진 엄격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비가입국간의 교역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유해폐기물의 부정적 거래 및 처리에서 비롯되는 국제환경문제를 예방하고자 한 1989년의 바젤협약에서 보다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지구환경문제의 심화에 따라 세계 각국은 국제기구를 통한 환경협약의 채택 외에도 환경과 경제의 통합, 환경친화적인 생산 및 소비체계의 정착, 효율적인 환경관리체계의

> 국가 및 지구 차원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경제원리의 하나로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 기반 조성,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의 지속적 추진, 환경기술의 도입과 환경산업 육성 촉진, 환경규제 등과 관련된 국제적 논의동향의 신속한 파악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구축 등과 같은 국내적인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 대응노력의 특징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번째 특징은 주요 선진 제국들이 경제활동에 대한 환경성 평가와 환경정책에 대한 경제성 평가 요구 등을 통해 국내 혹은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어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두번째 특징은 이들 선진국들이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무역과 연계된 국제환경규제의 강화를 통해서 이미 확보한 환경기술 및 관련 산업부문의 국제 경쟁력을 새로운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노력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녹색소비주의'의 범지구적 확산에 따른 각국 환경마크제도의 활성화 및 환경표준 국제화의 진전과 함께 진행되는 세계시장의 개방추세 속에서 자국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하여 자국시장을 보호하고 높은 환경기준과 앞선 환경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 관련 수출시장을 개척하려는 선진국 발전전략의 본질을 드러내 준다.

결국 이러한 주요 선진국의 대응노력은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1세기에 있어서 환경분야에서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가와 기업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임을 대변하는 것이다.

환경분야에서의 국제경쟁력 확보가 관건

21세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지구환경문제의 본질과 이에 대응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정책현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였을 때 국가 및 지구 차원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국내 환경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환경자원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통해 환경과 개발에 관한 새로운 인식의 틀로 등장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자유무역 및 시장경제체제하에 적용될 수 있는 경제원리의 하나로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종래 자유재로 여겨지던 환경자원에 적절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환경자원의 남용을 막고 무분별한 개발 및 성장이 가져오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제거하여 환경문제에 관련된 시장실패를 보정하는 한편 환경자원에 대한 적절한 가치평가를 전제로 하는 환경목적의 조세체계 확립이 그 해결책이라 하겠다.

둘째,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국내 산업생산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협약의 경우, 현재의 산업구조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에 따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다. 향후에도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에너지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더구나 향후 20~30년내에 화석연료가 고갈,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예상되므로 기후변화협약이 아니더라도 오염다배출형,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초미의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셋째, 환경기술의 도입과 자체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인책의 실시와 함께 환경산업의 육성이 촉진되어야 한다.

WTO 체제하에서는 기술혁신능력의 차이가 유일한 국제경쟁력의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 환경기술은 그 자체가 국제적 거래대상이며 창의적인 기술개발활동은 지속적인 독점적 기술우위 확보에 의한 장기적인 이윤보장의 기반이 된다. 이는 21세기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을 환경기술 개발과 환경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투자에 둠으로써 환경부

문 자체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선진화된 산업구조 구축에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환경규제 내지 기준강화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환경목적의 효과적 달성수단의 하나로 국제무역상의 규제와 제재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최근의 국제환경협약 논의동향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적절하고 시의성 있는 대응방안 수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논의동향과 정보를 상시적으로 면밀히 분석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 연구기관을 전담기구로 지정하고 전문인력의 확충과 연구에 필요한 재정적 · 기술적 지원체계를 세우는 일이 시급한 정책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공동노력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의 해결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요구된다.

단기적으로는 국제협조에 필요한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다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 강화를 기하고 관련된 국익의 보호를 위해서도 당당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지구환경문제 해결에 중심되는 역할을 담당해 나가려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공동목적하에서 환경 · 경제 정책이 수립돼야

21세기 초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MR(Millennium Round)에서는 환경이 투자자유화,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및 통신과 함께 4대 핵심 이슈의 하나로 등장할 전망이다. 또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과 관련된 규제일정이 구체화되면 국내산업의 경쟁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지구환경문제의 심화와 국제환경협약의 강화에 따른 대응체제 구축은 국가의 경쟁력 제고와 장기발전전략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이라는 서로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이제까지의 정책시스템을 탈피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공동목적하에서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이 입안 ·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지구환경문제의 심화와 국제환경협약의 강화에 따른 대응체제 구축은 국가의 경쟁력 제고와 장기발전전략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공동목적 아래에서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이 입안 ·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당위론적 목적만으로는 개별 경제주체의 구체적인 실천을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경제체제를 환경측면에서 저비용구조로 전환시킬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환경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도전적 목표 설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 같은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환경규제시스템의 조정 · 개선과 함께 기업과 소비자 등 개별 경제주체들이 환경의식을 스스로 제고하고 환경문제를 자신의 경제문제로 인식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렇게 발전된 환경보전의지를 실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가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야만 환경문제가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될 새로운 천년에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쌀 자급의 의미

서규용
농림부 농산원예국장

쌀은 세계 총 생산량이 3억8천만t 수준으로 아시아지역에서 90% 이상이 생산되어 대부분이 아시아인에 의해 소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간 쌀 생산량이 500만t 수준으로 세계 쌀 생산량의 1.3% 정도에 불과한 실정인데, 생산비가 많이 드는 소농구조이기 때문에 열등재인 쌀을 국내에서 자급하기보다는 수입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비교우위론에 따라 쌀을 수입하고 자급을 포기하여야 하는 것일까?

쌀은 생산국에서 대부분 소비되는 특성상 교역량이 총 생산량의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 입맛에 맞는 자포니카계통 쌀(찰기와 윤기가 있고 다소 둥근 쌀)은 전체 생산량의 10~15%에 불과하고 교역량도 200만t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양을 수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97년 기준 우리나라 쌀 생산액은 9조4천억원으로 벼재배농가 호당 804만원이다. 이는 농가소득의 23%, 농업소득의 49%로 농가경제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쌀 자급문제를 단순히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간과할 수 있다. 왜냐하면 쌀은 경제재이기 이전에 생명재이고 문화재이며 환경재이기 때문이다.

벼농사는 5천년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하면서 음식문화, 세시풍속 등 민족공동체 형성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겨레의 삶과 정신문화의 근간을 이루어 왔다. 전국토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논은, 5만여 자연부락의 삶의 터전으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정서의 안정 및 전통문화의 유지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논은 여름철 집중호우시 31억t의 물(춘천댐 저수량의 21배)을 일시에 저장하고, 논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136억t의 지하수(소양강댐 유효저수량의 7.2배)를 생성하는 등 홍수 조절, 지하수 생성, 수질 정화, 생태계 보전 등 경제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러한 벼농사의 역할과 기능은 식량안보론을 따로 거론하지 않더라도 쌀 자급만은 유지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공한다.

최근의 우리나라 쌀 재고량은 90년 1,406만석에서 96년에는 FAO 권고재고량 550만석의 31%인 170만석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96년부터 주곡의 자급기반 확충을 위해 쌀 생산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다. 그 결과 96년과 97년 2년 연속 대풍과 98년 평년작 이상의 생산으로 700만석 내외의 재고를 갖게 되어 주곡의 수급안정은 물론 외환부족으로 인한 경제위기하에서도 사회안정에 크게 기여한 효자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일본의 경우, 쌀 재고가 2,600만석(380만t)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농지전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휴경수당을 주면서 논을 보전하고 있어 우리가 쌀 자급을 이루지 못할 경우 식량주권을 일본에 빼앗기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쌀 자급노력은 농업내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전 국민이 이에 호응할 때 결실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을 움직여야 농업이 산다"는 슬로건하에 도시민·신세대·어린이 등 농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적은 계층을 대상으로 농업애정, 자연사랑, 농업의 공익적 기능 등에 대한 각종 홍보를 실시하여 주곡인 쌀 자급의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세계 최초의 뉴딜정책-청계천 준설사업

신현국
환경부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

청계천은 서울의 한복판인 종로구와 중구의 경계를 흐르는 조그마한 소하천이다. 길이 3.7km, 최대너비가 84m이고 북악산 · 인왕산 · 남산으로 둘러싸인 이 일대의 모든 물들이 여기에 모여 동쪽으로 흘러 왕십리 바깥 살곶이다리 근처에서 중랑천과 합쳐져 한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청계천의 본래 이름은 開川이었는데, 장마가 지면 물난리를 일으켜 민가가 침수되기도 하였다. 그러자 조선조 태종 12년인 1412년에 최초로 개거공사를 벌여 치수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하수도사업이자 환경사업이었다.

그러나 청계천의 본격적인 치수사업은 영조 36년인 1760년에 시행되었다. 당시 청계천 준설사업의 주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오염된 하천의 정화와 홍수방지였고 다른 하나는 실업자 구제대책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 서울(한양)의 인구는 20만명을 조금 상회하였고 청계천은 서울의 중심 하천이었으며 분뇨 · 쓰레기로 심하게 오염되어 악취가 나고 식수마저 조달하기 어려운 지경이었으며 퇴적된 각종 오물들로 인하여 홍수시 범람이 잦았다. 그리고 몇 년간 지속된 가뭄으로 흉년이 들어 농민들이 대거 서울로 몰려 들어 실업자들을 위한 고용정책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청계천 준설사업은 한성판윤 洪啓禧, 호조판서 洪鳳漢의 건의에 따라 주민 15만명과 삯을 주고 채용한 인부 5만명을 동원하고 錢 3만5천냥과 쌀 2,300석을 들여 57일간 대역사를 벌였다고 「영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청계천의 치수사업과 준설사업으로 하천의 흐름을 직선화하였고 유로변경과 함께 양쪽 측면을 석축으로 보완하였다. 오늘날과 달리 당시는 토목기술이 취약하고 기계장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관청에서 제공한 삽과 괭이가 장비의 전부였고 전적으로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청계천 준설사업은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정화사업이었고 정부가 주도한 대규모 고용정책이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어쩌면 세계 최초의 뉴딜(New Deal)정책은 청계천 준설사업이었는지도 모른다. 이 사업은 경제공황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된 1933년 미국의 뉴딜정책보다 170여년 앞서 실시된 것이다.

그후 순조 · 고종 때에도 청계천 준설공사는 시행되었고, 수표교 · 오간수교 · 광교 · 영미교 등 크고 작은 다리 24개를 증 · 개축하였다. 日帝 강점기인 1918년부터 1940년까지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적 의미의 하수도(암거 총길이 6,832m)가 청계천변에 설치되었다. 1958년에는 청계천 복개공사가 착수되었으며 1960년 4월에는 1단계로 광교에서 주교간 너비 50m의 간선도로가 만들어졌다.

1970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착공되어 1976년에 1일 15만t 처리시설이 완공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그 이후 많은 시설보완과 함께 말 그대로 깨끗한 하천인 청계천 살리기 운동이 지속되었다. 청계천은 우리나라 환경문제의 시발점이자 환경정화사업이 최초로 추진된 역사적인 장소로 기록될 것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실업문제도 해결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위축되는 환경문제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영조대왕의 청계천 준설사업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

경제정책의 산실을 찾아서

—건설교통부 건설기술심의관실—

21세기 기술입국을 선도한다

건설교통부 건설심의관실은
지식과 기술이 사회 및 경제구조의
핵심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건설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21세기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각종 건설기술
관련제도와 정책을 총괄하는
우리나라 건설기술의 사령탑이다.

글 · **안진우** / **객원기자**(문화일보 기자)

앞으로 300여일 후면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게 된다. 새 밀레니엄 시대는 새로운 천년을 맞는다는 시간적인 차원을 넘어 개인의 가치체계와 기업 및 국가의 생존전략에 있어 새로운 전환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도전과 기회의 시대가 될 것이다. 즉, 지식기반사회(Knowledge Based Society)의 도래에 따라 지식과 기술이 사회 및 경제구조 변화의 핵심요소로 작용하게 되어 지식과 기술을 어떻게 창출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개인과 기업 및 국가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다.

건설교통부 건설기술심의관실은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건설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통하여 21세기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각종 건설기술관련 제도와 정책을 총괄하는 우리나라 건설기술의 사령탑이다.

그동안 건설산업은 도로 · 철도 · 항만 · 주택건설 등을 통하여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건설투자의 GDP 비중이 20%를 상회하는 등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 90년대 들어서는 경부고속철도 · 인천국제공항 건설 등과 같은 초대형 국책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또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정보화의 진전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증대, 외국업체의 국내건설시장 진출 등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단계에 와 있다.

그러나 우리 건설산업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잘못된 제도와 관행 등으로 타산업에 비해 낙후된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국내 건설기술은 선진국의 67%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처럼 국내기술 수준이 낮은 것은 기술력을 경시한 가격경쟁 위주의 입찰방식과 시설의 양적 확충에만 주력하고 연구개발투자를 소홀히 하는 등 기술경쟁체제를 확립하는 데 소홀하였기 때문이다.

건설기술심의관실은 이러한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낙후된 우리 건설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건설기술관련 시책을 개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공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정책을 수립하고, 건설산업의 지식기반 확충과 건설교통 부문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건설CALS(Continuous Acquisition & Life-cycle Support) 구축사업과 기술개발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21세기 개발전략의 대명제인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도모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인 건설사업 시책을 개발하고, 30만명에 달하는 건설기술인력의 육성과 관리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건설기술심의관실은 몇 가지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건설사업은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으로 예산낭비 · 부실시공 · 덤핑수주 등의 많은 병폐를 낳아 온 게 사실이다. 이러한 고질적인 병폐를 혁파하기 위하여 2002년까지 사업비의 20% 절감을 목표로 '공공부문 개혁' 차원에서 범정부 차원의 '공공사업 효율화추진대책'을 수립중이다. 예산편성 · 집행 및 계약제도의 개선은 물론, 기획 · 조사 · 설계 · 시공 등 사업추진의 각 단계별로 문제점을 분석,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난해 10월부터 학계 · 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사업 효율화추진단'을 설치하여 대책안을 마련, 최종 마무리 작업중에 있다.

다음으로, 선진국에서 21세기 핵심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CALS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사업 전과정의 업무를 정보화하는 '건설CALS' 구축을 추진중에 있다. 지난해 6월에 건설CALS 기본계획을 확정한 데 이어 금년에는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건설인허가 민원사무 처리를 전자화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CALS 구축이 완료되는 2005년에는 공공발주 건설공사의 발주 · 입찰, 설계 · 시공 및 감리에 관한 서류와 도면 등 모든 정보를 발주자와 사업에 참여하는 설계 및 시공업체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교환 ·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업무처리와 사업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과 함께 건설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우리 건설산업의 기술경쟁력을 2002년까지 선진국의 80%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하여 97년 12월에 수립한 「제2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1998~2002년)에 따라 기술력 제고를 위한 95개 중점추진과제를 총괄하는 한편 R&D

예산 75억원을 투입하여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고 SOC 등 국토기반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89년부터 건설신기술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지난해까지 총 139건을 신기술로 지정하였다.

특히 지정된 신기술의 70% 이상이 중소업체가 개발한 기술로서 신기술지정제도가 IMF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의 경쟁력 확보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 신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신기술개발자를 벤처기업에 포함시켜 세제 및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지정된 신기술은 현장에서 우선 사용토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설계 및 감리용역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설계·감리용역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도록 하는 설계·감리용역 손해배상보증제도를 지난해 7월 1일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공사관리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건설기술관리법」 등 여러 법령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감리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건설공사의 기획·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등 각 단계별로 발주자의 목표대로 공사비, 공사품질 및 공사기간이 확보되도록 건설과정에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선진국형 공사관리기법인 '건설사업관리제도'(CM)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기술인력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기술인력의 상시고용에 따른 업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기술자도 사업참여를 허용하는 '프리랜서 기술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친화적인 건설사업수행을 위하여 금년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을 전후하여 환경친화적 건설정책방향과 추진체계를 제시하는 「환경친화적 국토건설 강령」을 선언할 계획이다. 생태도시와 자연형 하천 등 환경친화적 건설기술과 평가기법을 개발하고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정비도 추진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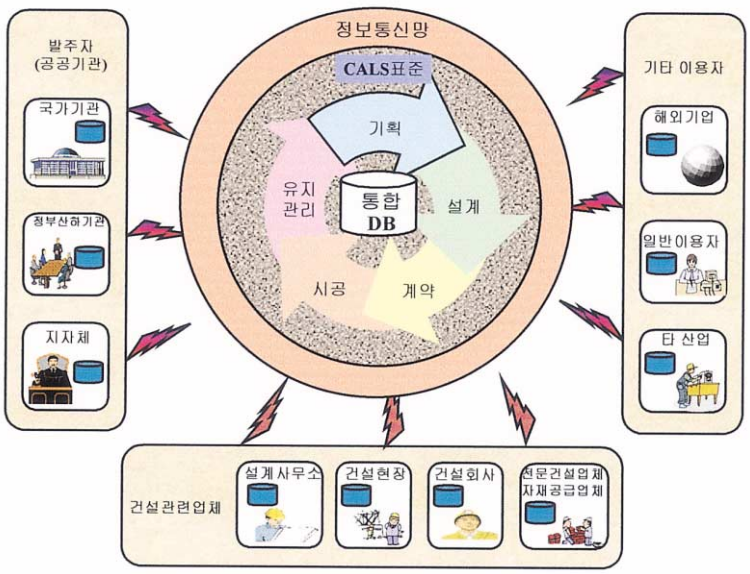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양질의 품질확보를 위한 건설기술분야 규제를 개혁하는 것도 중점과제 중의 하나이다. 우선 건설기술자의 신고의무를 폐지하여 자율신고체제로 전환하고, 매 3년마다 1주일 이상 받도록 하던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보수교육훈련 의무를 폐지하여 현장이동이 잦은 건설기술자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종전에 50억원 이상인 도로·철도 등 22개 주요 공사를 대상으로 하던 책임감리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축소하는 한편, 그동안 건축사 등 건설분야 전문가로 한정해 온 감리회사의 대표자자격제한을 폐지하여 감리회사의 설립제한을 완화하였다.

또한 그동안 고교출신 기술자는 고급기술자와 고급감리원 자격까지만 허용하였으나 18년 이상 실무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 자격까지 허용하였다.

또한 건설기술용역입찰제도를 개선하여 3월부터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 건설기술용역을 종

건설CALS개념도



전 1억5천만원 이상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심사를 통과한 5~7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던 입찰참가자격자수 제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중소용역업체의 입찰참가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건설기술심의관실은 남인희(南仁熙, 47)국장 지휘하에 기술정책과, 건설기준과, 건설관리과 등 3개과로 구성되어 있다.

남 국장은 기술고시 13회로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청와대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 투자심사담당관, 도로건설과장, 도로정책과장, 교통시설국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기술관료로서 도로 및 공항기술사를 비롯한 3개의 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통이다. 해박한 지식과 합리적인 사고로 업무장악력이 뛰어나고 조직내 인화를 강조하는 소탈한 성품의 소유자다.

▲ 기술정책과는 건설기술심의관실의 주무과인 동시에 건설지원실의 주무과로서 건설기술정책을 총괄하는 한편 공공건설사업 효율화대책과 건설기술진흥계획 수립,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과 건설CALS 구축, 건설기술인력 육성·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신인기(申仁基, 51) 기술정책과장은 한양대 환경대학원을 졸업하고 영국 런던대를 거친 도시계획기술사로서 수도권계획과, 청와대 지역균형발전기획단, 건설관리과장, 건설기준과장 등 지역계획 및 기술분야의 주요 부서를 거쳤다. 명쾌한 논리전개와 빠른 상황판단으로 현안사항을 매끄럽게 처리하는 업무추진력과 함께 친화력이 뛰어나 안팎으로 신망이 두텁다.

▲ 건설기준과는 각종 설계 및 시공기준의 제정·연구, 건설기술용역의 육성지원시책 수립, 설계감리제도의 발전, 대형공사 입찰방법 및 일괄입찰·대안입찰에 관한 연구,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을 위한 정책과 기술개발 등을 담당한다.

이영근(李靈根, 45) 건설기준과장은 서울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공학박사로 기술고시 13회에 합격, 미국 럿거스대를 거쳐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건축설비과장, 건설관리과장 등의 주요 부서를 거쳤다. 탄탄한 이론과 현실감각을 바탕으로 각종 토론을 주도하며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과 폭 넓은 대인관계가 돋보인다.

▲ 건설관리과는 건설감리제도의 운영·연구, 건설신기술 지정·관리, 건설표준화제도의 연구, 건설공사관리기법의 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김경수(金冏洙, 44) 건설관리과장은 기술고시 13회로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리즈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구파이다. 국립지리원 지리정보과장, 고속철도건설기획단 건설지원과장 등 주요 부서를 거쳤다. 소탈하면서도 치밀한 업무처리와 함께 정보화에 대한 안목과 의욕이 남달리 강하다.

21세기가 한걸음 한걸음 다가오고 있다. 지식과 기술이 가치창조의 원천이 되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기술입국의 선봉에 서 있는 건설기술심의관실 직원에게 격려와 기대를 함께 보낸다.

WTO 분쟁해결제도와 우리의 과제

조태열
駐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참사관

WTO 체제를 흔히 '규범에 입각한 다자무역체제(rule based multilateral trading system)'라고 정의한다. WTO는 과거 GATT 체제의 규율 대상 밖에 있었던 서비스, 지적재산권, 농산물 분야 등을 포괄하는 방대한 실체법 규범을 토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범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싸고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마련인 다양한 분쟁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지 않고서는 다자무역체제의 안정성(stability)과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을 기대하기 어렵다.

WTO 분쟁해결협정(DSU;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은 이러한 측면에서 GATT 체제의 결함을 대폭 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4년간 실제운용에 있어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규범에 입각한 다자무역체제'를 일층 강화하는 데 상당히 기여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WTO 출범 이후 98년 8월말까지 3년 반 남짓한 기간 동안 WTO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된 분쟁은 총 142건으로서 연평균 약 40건의 분쟁이 WTO에 회부되고 있는 셈이다. 47년간 존속한 GATT 체제 하에서의 분쟁해결 사례가 총 300건(연평균 약 6건)에 불과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괄목할 만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제소 건수도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은 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회원국의 신뢰가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과거 GATT 체제하에서는 분쟁 당사국들이 고의로 분쟁해결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패널보고서의 채택을 거부할 수도 있었으며, 채택된 패널보고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집행할 제도적 장치도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GATT 체제가 패널 절차를 통해 보다 규범 지향적인 체제를 꾸준히 발전시켜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즉, GATT 시대의 분쟁해결 절차는 제도 자체보다는 축적된 관행을 통해 유지·발전되어 온 것으로서 체제 자체의 결함에 비해서는 당초 기대보다 훨씬 잘 기능해 왔으며, 오히려 국제사법재판소(ICJ) 등 여타 국제분쟁해결기구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해 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UR 협상은 GATT 체제의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고 보다 규범지향적이고 효과적이며 이행 가능한 분쟁해결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주요 협상 목표의 하나로 추진하였다. 27개 조문, 4개 부록으로 구성된 WTO 분쟁해결 협정이 그러한 노력의 총결산이다.

WTO 분쟁해결협정은 다자무역체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GATT 체제의 결함을 대폭 개선했을 뿐 아니라 지난 4년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는 데 상당히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분쟁해결절차가 선진국에 유리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점 등 제도운영 과정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GATT 체제의 결함을 개선한 WTO 분쟁해결협정

WTO 분쟁해결협정은 GATT 체제의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새로운 요소들을 도입하였다.

첫째, 분쟁해결 절차 단계별로 보다 엄격한 시한을 설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패널 진행과 패널의 판정 및 권고사항의 이행이 부당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둘째, 패널보고서가 사실상 자동 채택되게 함으로써 패소국이 패널보고서 채택을 봉쇄할 수 없게 하였다. 이러한 네거티브 컨센서스 원칙은, 패널을 설치할 때와 패널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패소국에 대한 제재조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적용되고 있다.

셋째, 상소제도를 도입하여 패소국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분쟁해결제도의 일체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넷째, 분쟁 당사국의 권익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물론 패널이나 상소기구 판정의 불이행 여부 및 불이행시 제재조치 등도 모두 WTO 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의 다자적 판정을 선결 요건으로 확립함으로써 일방주의를 금지하였다.

다섯째, 기존 GATT 협정상 산재해 있던 각종 분쟁해결 규정을 통일하여 하나의 통합된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분쟁관할권 문제(소위, forum shopping)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였다.

그러나 WTO 분쟁해결제도가 이처럼 새로운 요소들을 도입하였다고 해서 GATT 분쟁해결 절차와 전혀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GATT 시대에 축적된 관행과 전통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제도의 연속성과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DSU 3조 1항은 GATT 22조와 23조가 WTO 분쟁해결 절차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본 원칙 규정임을 명문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한 WTO의 의사결정 방식도 GATT시대부터의 관행인 컨센서스 원칙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GATT 패널 보고서들도 WTO 패널이나 상소기구 판정시 선례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한편, WTO 창설 협정 9조 2항은 협정 해석에 관한 배타적 권한이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협정 해석에 관한 의결정족수가 4분의 3이라는 다수결로 되어 있어 사실상 패널 및 상소기구가 사안별로 관련 협정을 해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WTO 분쟁해결제도는 본질적으로 GATT 시대 이래의 판례법체제(case law system)를 계승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GATT 체제가 실용주의(pragmatism)를 기초로 발전해 왔다면 WTO 체제는 규범에 입각한 법리주의(legalism)를 보다 지향하고 있다는 데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DSU 3조 2항은 WTO 협정을 해석함에 있어 국제법 해석에 관한 관습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종래 많은 학자들이 GATT는 일반 국제법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 영역으로 인식해 왔음에 비추어 적지 않은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도 WTO 패널이나 상소기구 판정에서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제반 원칙들이 빈번히 원용되고 있다.

제도운영 과정상 드러난 지나친 법률적 접근방식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

상술한 바와 같은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에도 불구

하고, 지난 4년간 DSU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그 강도가 낮기는 하지만 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조금씩 들려오고 있다.

WTO가 너무 지나치게 법률적 접근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그 첫번째 비판이다. GATT 시대의 실용성과 신축성이 법률적 경직성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교섭 중심의 관행을 기초로 외교관들이 주도하던 GATT시대와는 달리 법률 논쟁을 중심으로 법률전문가들이 WTO의 논의를 주도하는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WTO가 회원국 중심(member-driven) 체제에서 변호사가 주도하는(lawyer-driven) 체제로 변질되고 있다는 냉소적 비판도 나오고 있다.

둘째, WTO 분쟁해결 절차가 WTO 법체계에 대한 고도의 법률지식과 경험 및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진국에게 유리한 제도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개도국들은 WTO 법률전문가가 절대로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 · EC 등 선진국의 민간 변호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적 · 물적 자원 양면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 중에서도 정부내에 최고 수준의 WTO 법률전문가 그룹(in-house legal service)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 · EC 등을 제외하고는 여타 선진국들도 전문인력 측면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기는 매한가지이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끝으로, DSU 운용 과정에서 협정 규정의 의미나 관련 규정간 상호관계가 불분명하여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 이행조치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분쟁이 늘어가고 있는 것도 주의를 요하는 대목이다. 최근 바나나 분쟁에서 EC의 DSB 권고 이행조치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야기된 미국과 EC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은 비단 양측간 분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양대 교역국들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면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의 이행확보와 다자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뿐만 아니라 WTO 분쟁해결제도의 신뢰성도 크게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94년 마라케시 각료회의에서는 DSU 운용과정에서 야기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WTO 분쟁해결제도를 더욱 개선할 수 있도록 98년말까지 DSU 재검토 작업을 완료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였으나 기한내 작업이 마무리되지 못하여 금년에도 계속 작업을 연장하여 진행중에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7개국이 비공식 제안을 문서로 제출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99년 7월말까지 DSU 재검토 작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으나, 상술한 문제점들이 이러한 작업을 통해 근원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제도의 선진화, 통상법 전문가 양성 등이 시급한 과제

우리나라는 WTO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제소국 입장에서건 피소국 입장에서건 WTO 회원국 중 분쟁해결 절차에 가장 많이 관여해 오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미국을 상대로 우리측이 제소하여 최근 각각 반덤핑 조치 철회 및 패널 승소의 개가를 올린 바 있는 컬러 TV, DRAM 반도체 분쟁과 같은 경우도 있지만, 우리측이 피소국의 입장에서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WTO 사무국에서 발간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현재 제소 건수(2건)에서 11위, 피소 건수(8건)에서 6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는 주요 교역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비중이 그만큼 커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아직도 많은 교역 상대국들이 우리의 제도와 관행을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현재 추진중인 제도의 선진화, 개방화, 규제 완화 등에 더욱 힘써 분쟁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본다.

우리의 제도와 관행에 문제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단지 국내적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만으로 WTO로 분쟁을 끌고 간다면 이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이미지를 위해서도 썩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물론 컬러 TV, DRAM 반도체의 경우처럼 우리의 정

당한 요구가 양자 차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당하게 WTO에서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가 시장 개방이나 제도의 시정을 요구받고 있는 사안의 경우에도 우리의 제도와 관행이 국제규범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선다면 WTO 분쟁해결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지만, 승산 없는 싸움은 아예 시작하지 않는 용기와 지혜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WTO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내 체제를 시급히 갖추어야 한다.

> 우리나라가 교역 상대국과의 다양한 분쟁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제도의 선진화 · 개방화 · 규제완화 등에 더욱 힘써야 하고, WTO 분쟁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통상법 전문가를 시급히 육성해야 하며, WTO 분쟁해결 절차 재검토 작업에 우리의 관심사항을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 · EC 등과 같은 수준의 정부내 WTO 법률전문가 그룹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외무부가 외교통상부로 개편되면서 일부 통상전문 변호사들을 채용하였으나 WTO 패널이나 상소심을 독자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며, 적어도 수년간은 훈련과 교육 및 경험 축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 민간 법조계에도 WTO 패널을 감당해낼 만한 국제통상법 전문가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상당한 소송 비용을 들여가면서 WTO 법률에 정통한 외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고도의 법률적 논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고민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개도국들과 일본 · 호주 · 뉴질랜드 · 북구제국 등 많은 선진국들에게도 공통된 것이기는 하지만 단기간내에 해소될 문제가 아니라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동안 3건의 WTO 분쟁패널(주세 분쟁의 경우 상소심 포함)을 경험하면서 전문 법률인력의 국산화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는 하였으나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관련된 WTO 분쟁이 계속 늘어갈 것임에 비추어 정부는 물론 학계나 민간 법조계에서도 경험과 지식, 언어 등 모든 면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WTO 법률분야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대학들의 법학 교육 방식부터 근본적으로 개혁하여야 한다. 법학 교육의 커리큘럼부터 바꾸지 않고서는 WTO 시대가 필요로 하는 전문 법조인력 양성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지적해 둘 사항이 있다. 통상전문가는 경제전문가(economist)여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 통념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이다. WTO 분쟁은 물론 각종 양자 및 다자 통상협상에서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전문가라기보다는 통상법전문가(lawyer)이며, 지금 우리에게 부족하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인재양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대상도 바로 통상법전문가라는 점을 새로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중인 WTO 분쟁해결 절차 재검토 작업에 우리의 관심 사항을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다자무역협상 대상에 DSU 개정문제가 포함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나 현재 진행중인 DSU 재검토 작업이 금년 7월말까지는 일단 마무리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제도가 잘 운용되고 있으므로 미세조정(fine – tuning) 수준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작업진행 추이에 따라서는 상당한 폭의 실질적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WTO 실체법 규정이 무역규범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지만 교역국간 분쟁은 결국 절차법인 DSU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므로 협상대상 품목이나 관련 국내산업의 이익보호 못지 않게 절차적 규범개정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구체적이고 산술적인 이익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등한시해 버리는 우리의 고질적 병폐를 하나씩 고쳐 나갈 때 우리의 협상력도 선진국 수준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될 것이다.

세계 10대 외국인투자 유치국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개방경제를 기초로 한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간 외국인투자 유치를 우리 경제정책의 주요 우선순위 과제로 선정,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1월 28일 개최된 외국인투자기업 대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국인투자는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오조, 일석육조의 국민경제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

권태균
재정경제부 투자진흥과장

외국인투자 유치는 장기 · 안정적인 외자 확보방안

먼저, 외국인투자는 외국투자가가 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원리금의 상환의무가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이익에 따라 이동이 심한 포트폴리오 투자나 차입에 의한 자본조달과 달리 장기 · 안정적인 외자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외국인투자는 공장건설 및 생산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직접 채용하는 한편, 중간재 · 원자재 등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기업의 고용을 증대하는 등 고용 창출효과도 가지고 있다. 이와 아울러 외국인투자는 첨단기술과 선진 경영기법이 함께 도입됨으로써 국내기업의 기술수준과 경영관행을 개선하여 국내산업의 전반적인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킨다.

특히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각이 불가피한 사업부문과 부동산에 대한 수요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는 효과도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는 다양하고 넓은 해외수출시장을 함께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해외시장 개척이 용이하고 수출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이러한 광범위한 이익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성공적인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경제회생 및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외국인투자제도를 종전의 '규제 · 관리' 중심에서 '촉진 · 지원' 중심으로 완전개편함으로써 경쟁국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외국인투자 제도를 마련하였다.

지난해 사상 최대규모인 89억달러의 외국인투자 유치

먼저, 외국인에게 내국민대우를 확대하고 자유로운 투자를 보장해 주기 위해 98년중 세 차례에 걸쳐 30개 업종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99년 1월 현재 총 1,148개 업종 중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은 국가안보와 우리 문화의 보호를 위한 23개(미개방 : 7, 부분개방 : 16)에 지나지 않아 투자자유화율이 99.4%에 달하고 있다.

또한 98년 5월말에는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인수 · 합병을 전면허용함으로써 외국인도 국내기업의 기존주식을 100%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국가안보상 일부 방위산업체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98년 6월에 「외국인토지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토지취득에 관한 자격, 용도 및 면적제한을 철폐하였으며 그 절차도 신고제로 전환하여 외국인의 토지취득시 불편을 초래해 온 요소를 제거했다.

그리고 외국인직접투자제도를 수요자 중심, 지방정부 중심으로 개편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 98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직접처리민원제 · 일괄처리제 · 자동승인제 등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의 신속처리절차를 도입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국공유재산의 임대제도 개선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경쟁국과의 투자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지역제도'를 도입, 조세감면 등 각종 지원을 부여하고 KOTRA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외국투자가에 대한 상담, 신고접수, 민원처리대행, 사후관리 등 외국투자가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ASEM 등 대통령의 성공적인 정상외교, 투자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 그리고 과감한 금융 · 기업구조개혁의 추진 등에 힘입어 투자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됨으로써 지난해에는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규모인 89억달러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였다.

이는 97년의 69억7,100만달러 대비 27.0%가 증가한 수치로 지난 93년 이래 6년째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98년 12월에는 외국인투자가 19억4,300만달러에 달하여 1개월간의 투자금액(필자 註: 종전 최대는 97년 4월의 15억6,500만달러임)으로도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하였다.

또한 실제투자(도착)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는 97년 23억달러로서 전세계 32위, 아시아지역 9위를 기록였으나, 98년에는 약 50억달러를 상회하여 전세계 20위권, 아시아지역 4위권내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외국인투자가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데 견인차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중장기 유치 목표를 설정, 2002년까지 세계 10대 외국인투자유치국으로 진입하도록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펴 나갈 것이다.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ASEM 등 대통령의 성공적인 정상회교, 투자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그리고 과감한 금융 · 기업구조개혁의 추진 등에 힘입어 투자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됨으로써 지난해에는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규모인 89억달러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였다.

올해 150억달러 목표로 외국인투자 유치에 주력

이를 위해 올해에는 150억달러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목표로 새로운 외국인투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 정착시키고 투자유치활동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주변환경을 경쟁국 수준 이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인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표 1〉 연도별 외국인투자 동향

(단위 : 백만달러, %)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투자금액	1,044	1,317	1,941	3,203	6,971	8,852
전년 대비 증가율	16.8	26.1	47.4	65.0	117.6	27.0

〈표 2〉 98년도 월별 외국인투자 동향

(단위 : 백만달러,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투자금액	130	199	243	567	659	663	1,235	407	534	894	1,378	1,943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85.1	-45.2	-72.6	-63.8	170.1	24.9	203.4	128.7	23.3	147.6	1,414	87.4

우선,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제정 · 시행으로 외국인투자제도는 경쟁국 수준 이상으로 개선되었으나 행정규제, 노동시장, 무역 · 통관제도 등 기업경영환경, SOC, 외국투자가에 대한 인식 등 외국인투자의 주변환경의 개선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다.

따라서 외국인투자를 저해하는 주변환경을 수요자인 외국인의 입장에서 종합평가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경쟁국에 대한 종합적 우위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외국인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인에 의한 인수 · 합병(M&A) 및 자산매수 방식의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M&A형 외국인투자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중 외부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주요 외국 경영컨설팅회사와 공동으로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을 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전략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경제적 효과가 큰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선정, 집중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 문화 · 관광, 석유화학, 정보통신, 사회간접자본, 유통, 에너지 등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효과가 큰 산업을 중심으로 각 지자체별 유치계획과 KOTRA의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의 집중 유치대상사업 중 10개 정도의 주요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관련부처의 실무자로 구성된 지원전담반을 설치,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것이다. 선정된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외국인투자실무 위원회에서 유치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새롭게 도입된 외국인투자지역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대규모 프로젝트가 입주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조세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고 기존 미분양 공단에도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단 부지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관한 표준절차와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외국인투자지역에 신속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지식기반산업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

이와 아울러, 99년도 5대 국정지표 중 하나인 지식기반의 확충을 통해 21세기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전반의 지식집약화를 촉진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3월중 관계부처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견수렴을 거쳐 현재 고도기술 수반사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 등에 한정되어 있는 조세감면 대상사업을 지식기반산업 분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체계를 정착시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유치의 중심이 되고 국가는 이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신속한 외국인투자유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3월중에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및 분양가액 인하, 교

〈표 3〉 각국의 외국인투자 순위 (1997)

(단위 : 백만달러)

순위	국 가 명	금 액	순위	국 가 명	금 액
1	미 국	90,748	11	네 덜 란 드	8,725
2	중 국	45,300	12	캐 나 다	8,246
3	영 국	36,897	13	아르헨티나	6,327
4	프 랑 스	18,280	14	러 시 아	6,241
5	브 라 질	16,330	15	스 페 인	5,556
6	벨 기 에	12,550	16	칠 레	5,417
7	멕 시 코	12,101	17	인도네시아	5,350
8	싱가포르	10,000	18	폴 란 드	5,000
9	스 웨 덴	9,659	19	베네수엘라	4,893
10	호 주	9,584	20	아 일 랜 드	4,152
한국 32위 (2,341)					

자료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1998

〈표 4〉 아시아 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 순위 (1997)

(단위 : 백만달러)

순위	국 가 명	금 액	순위	국 가 명	금 액
1	중 국	45,300	6	인 도	3,264
2	싱 가 포 르	10,000	7	일 본	3,224
3	인도네시아	5,350	8	홍 콩	2,600
4	말레이시아	3,754	9	한 국	2,341
5	타 이	3,600	10	대 만	2,248

자료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1998

육훈련보조금 등 지자체의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 담당 인력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도입, 우수 투자유치 사례에 대한 설명회 개최, 지자체의 투자 유치활동시 인력 및 투자정보 등을 꾸준히 지원함으로써 지자체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150억달러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목표로 새로운 외국인투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 정착시키고 투자유치활동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행정규제, 노동시장, 무역 · 통관제도 등 외국인투자 주변환경을 경쟁국 수준 이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KOTRA의 외국인투자지원서비스를 본격화하여 투자지원의 직접처리민원을 계속 확대하고, 일괄처리민원제 · 자동승인제 및 사전승인제 등 외국인투자 민원의 신속처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투자지원센터 간의 업무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공무원의 외국인투자지원센터 파견을 확대하고 지방무역관과 시 · 도 투자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는 시 · 도 투자진흥협의회의 설치를 1/4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상반기내에 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외국인투자정보 네트워크(Korea FDI Infonet)를 설치하여 외국인투자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외국인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재경부장관)를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외국인투자 활성화대책, 애로사항 개선 및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 외국인투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신속히 결정하고 관련정책을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대규모 외국인투자사업의 경우 지방정부나 KOTRA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

주요 투자국과 양자간 투자협정 서둘러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대외신인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고 외국인투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논의중인 미국 · 일본과의 양자간 투자협정을 조속히 마무리짓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양자간 투자협정모델을 마련, 우리와 투자관계가 밀접한 이스라엘 · 멕시코 · 쿠웨이트 등 주요 투자국가와 투자협정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체결해 나갈 것이다.

또한 2월까지 각종 법령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공고하고 이를 국제 수준에 맞추어 점차 축소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에 대한 개방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외국인투자 홍보활동도 강화하여 'APEC 투자박람회'(6월초 개최 예정) 등 각종 투자관련 국제 행사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제도와 개선내용을 적극 홍보해 나가고자 한다.

국내에 진출해 있는 주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세계적인 다국적기업 및 투자컨설팅회사, 외국의 인수합병 전문중개회사 및 법률회사 등 1천여명의 국내외 주요 투자가 및 투자업무관련자를 선정, E메일 등을 통하여 정기적인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등 투자자관계(IR)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및 경영컨설팅회사 등과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 여론을 수렴하고 회원기업들을 통해 지속적인 투자확대 및 잠재투자가에 대한 홍보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방안의 실천을 위해 외국인투자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일선공무원에 대해 외국인투자의 중요성과 외국인투자 관련제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언론기관 · 노조 · 소비자단체 · 교원 등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유치의 장점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외국인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생활하고 기업활동을 하는 것이 내집에 온 것처럼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대통령께서 수 차례 강조하신 바 있는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사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 것을 목표로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99년 환경정책의 방향과 과제

전병성
환경부 정책총괄과장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라고 흔히들 말한다. 한 나라의 환경수준이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환경문제는 이제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전제조건이 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독일의 미래위원회(Future Commission)는 "21세기는 3개의 목표가 하나의 길로 가는 'Three Way One Path'의 세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개의 목표란 다름 아닌 경제적 성과의 증진, 사회적 통합의 실현 그리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확보이다. 이와 같이 환경은 곧 21세기가 지향해야 할 3대 목표 중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현시점에서 이제 우리도 환경이 제자리를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미래세대의 생존터전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환경은 반드시 보전되고 복원되어야 한다. 성장일변도의 경제체제(growth-led economy)는 인간중심의 경제체제(human-centered economy)로 탈바꿈해야 한다. 모든 정책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복지증진에 있기 때문이다.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의 조화 · 통합 도모

그동안 개발사업 과정에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사회비용이 초래되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시화호의 건설일 것이다. 당초 시화호는 담수호를 건설하여 시화공단의 공업용수와 인근지역의 농업용수로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4,90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회비용을 최소화하려면 개발사업에 대한 철저한 환경성 고려로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금년에는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를 더욱 강화하여 사업의 입안단계부터 환경성이 고려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지표를 마련하여 농업 · 교통 · 개발 등 경제 · 사회정책 모든 분야에서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환경친화적 사회로의 지향, 각 주체의 환경책임 제고 등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환경정책에 대한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오염자책임원칙을 도입하고 시행중인 경제적 수단의 개선과 함께 수도요금 등 환경재의 가격도 점차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물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 추진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환경정책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하천수를 상수원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하천수질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해에는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이는 팔당상수원 수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대한 수변구역의 지정, 하류지역에 원수부담금을 부과하여 마련된 재원으로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의 수립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의 대폭적 확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올해는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 환경성 검토'를 더욱 강화하여 사업의 입안단계부터 환경성이 고려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하여 환경친화적 사회로의 지향, 각 주체의 환경책임 제고 등을 도모하고, 오염자책임원칙을 도입하는 한편, 수도요금 등 환경재의 가격도 점차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에는 이러한 팔당특별대책의 시행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오염총량제를 희망지자체부터 우선 시행하며 팔당호 퇴적물의 준설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낙동강에 대해서는 98년중 시행된 낙동강 수질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낙동강 유역의 수질보전종합대책도 강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강과 영산강수계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여 2000년까지는 이 지역에 대한 수질개선 종합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수장 수질검사를 엄격히 하고 노후수도관 2,585km를 개량할 계획이다.

수자원의 절약과 재이용을 확산시키기 위한 수요관리정책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요금을 점진적으로 현실화시켜 정부의 재정부담과 물 낭비를 줄이도록 하며, 절수형 수도기기와 중수도 보급을 확대하여 물 절약형 생활패턴이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편, 하천 및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99년중 하수처리시설 232개소, 분뇨처리시설 26개소, 폐수처리시설 27개소를 설치하고 정수공정의 현대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도 약 2,400억원을 투자하여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할 것이다.

맑고 깨끗한 대기 질 회복

맑은 공기 회복을 위한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와 공단지역의 대기는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대기오염물질의 감축은 맑은 공기를 유지한다는 것 외에도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대도시 공기오염의 주범인 경유자동차 특히 시내버스의 매연을 줄이기 위하여 1만5천대에 달하는 시내버스를 2007년까지는 모두 천연가스(CNG)로 교체할 예정이다. 또한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정부간 자발적 협약제'를 도입, 에너지 절약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토록 할 계획이다.

대기오염물질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오염물질 처리능력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하여 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규제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시킬 것이며 다이옥신, NOx, VOC 등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도 강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 증가 등에 따른 대도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과 연료품질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 총 자동차대수의 30%(97년)에 불과하면서도 오염물질 배출량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유럽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벤젠 · 방향족화합물 등의 자동차 연료품질기준도 강화시킬 계획이다.

자원 재활용 촉진 및 유해폐기물의 불법처리 근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은 환경을 보호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 주요 수단이다. 금년에는 공공기관의 재활용품 의무구매를 확대하고 중고물품 교환과 알뜰시장을 활성화시켜 재활용을 촉진시킬 것이다. 재활용품 가격변화 · 재고량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재활용품판매지원센터' 설치 확대 등을 통해 재활용품의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용산업체에 대한 금융지원(500억원)을 확대하여 재활용산업의 경쟁력도 높여나갈 것이다. 특히 폐기물 통합재활용체계를 도입하여 제품생산자에게 재활용이 가능한 폐

기물의 회수 재활용에 대한 직접적 책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또한 감량화 우수사업장 지정을 확대하고 종량제 적용대상 일반폐기물 발생사업장(1일 300kg 이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폐기물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가전제품의 포장용 완충재의 감량의 무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자원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폐기물 위생처리기반 확충에 540억원,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에 220억원, 소각시설과 음식쓰레기 처리시설에 670억원, 재활용 증진에 1,244억원을 각각 투자하여 폐기물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은 감염위험이 높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는 그간 「의료법」에 의해 부실하게 관리되어 왔던 의료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으로 변경하여 관리기준, 위반시 벌칙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국내에는 약 3만6천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으며 매년 약 200종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유독물 저장 · 보관 · 수송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신물질에 대한 환경위해성 평가를 강화하는 등 사전예방적 환경관리를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특히 유해화학물질 '환경배출량 보고제(TRI)'를 실시하여 사업자가 환경에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을 파악 · 신고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자의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할 것이다.

아울러, 한 · 일 공동으로 내분비계 장애물질(일명 환경호르몬)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등 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리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생태계의 자연적 · 지역적 균형성 유지 보전

자연생태계를 효과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국토환경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하여 지역의 특성, 환경용량, 현재와 장래의 활용도 및 개발수요 등을 고려한 국토환경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할 것이다. 아울러 연차적으로 생태계보전지역을 확대하여 우수한 생태계를 보전하고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처인 습지 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습지보전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금년중에 우선 30여개의 도서에 대한 현지 ·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희귀동식물서식지인 無人島嶼를 '특정도서'로 지정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조성하여 백두대간 등 생태계 단절지역을 복원하고 폐금속광산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 실시 등 오염토양 복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특히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자연친숙공간 조성을 위해 자연형 하천정비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생태적으로 건전한 공간조성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 보급할 것이다.

한편, 자연훼손지역 복구, 보호사업 확대, 자연자원조사 등을 통해 공원자원을 보호하고 국립공원 입장 사전예약제 도입, 자연휴식년제 확대 등을 통하여 친자연적 탐방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과학기술 개발 및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유도

청정환경기술은 환경보전과 경제의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이른바 윈-윈(win-win) 전략의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청정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98년에는 UNEP와 공동으로 국제청정기술회의를 개최하고 '청정기술에 관한 국제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금년에는 청정기술이 더욱 확산 · 정착되도록 G-7기술개발사업과 신기술평가 등 기술개발업무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지난해 말 울산과 여천에 신설된 지역환경기술센터를 활성화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기술이 개발되도록 하며, G-7연구개발사업, 환경정책연구개발사업, 종합환경연구단지 조성 등에 4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환경친화기업 지정범위를 제조업 및 대기업 중심에서 건설업 · 서비스업 및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환경마크 지정기준도 조정하여 기업이 환경성을 고려한 제품을 만들고 제품생산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나가는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을 촉진시킬 것이다.

환경관련 산업과 환경과학기술을 2000년대 수출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 환경시설 설치자금(540억원)을 지원하고 기초시설의 기술진단, 신기술평가사업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한편,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나 운영을 민간에 위탁 확대하여 환경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외국의 첨단기술과 자본이 유치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년에

는 63개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고 2000년까지는 모든 환경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도록 할 계획이다.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환경정책 중의 하나이다. 금년에는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팔당특별대책의 시행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수장 수질검사를 엄격히 하고 노후 수도관 2,585km를 개량할 계획이다.

협력적 관계에 기반한 환경보전 노력 강화

환경문제는 인간의 모든 활동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노력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다. 따라서 범국민적 · 범정부적인 참여와 관심 즉, 협력적 관계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교통 · 에너지 · 국토개발 · 농업 ·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관계부처와 환경부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스스로도 정책결정, 정부조달, 시설관리 및 정부운영상 환경성과를 증진시키는 녹색정부를 지향할 것이다.

자치단체별로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도록 유도하여 지방환경관리체계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 ·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정부와 기업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운영하여 환경정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에서 손쉽게 이용될 수 있는 환경기술 개발에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또한 민간환경단체, 시민들의 자율적인 환경운동을 적극 지원하여 시민들에 의한 자율환경감시체계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민의 환경보전참여 확대 방안으로 사회원로, 시민단체, 환경전문 공무원으로 구성된 '환경홍보단'을 구성하여 환경보전인식을 확산시키고, 환경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시킨 '사이버 환경교육 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세대를 위한 환경교육에도 힘쓸 계획이다.

기후변화협약 등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97년 12월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합의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고 98년 11월 제 4차 당사국회의에서는 개도국인 아르헨티나와 카자흐스탄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할 뜻을 보임에 따라 우리나라와 같은 선발개도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압력이 더욱 거세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는 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지구환경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금년에는 기후변화 등 국제환경규제 움직임에 대하여 관계부처간 업무분담체계, 협의기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범정부적인 지구환경 보전전략을 수립 추진할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협약 후속협상에 대비하여 각 부처의 분야별 세부대책을 총괄 · 조정하는 '지구온난화방지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함과 아울러 지구온난화물질을 줄이기 위한 「지구온난화방지법률」을 제정토록 할 것이다.

동북아지역 환경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99년 1월 13일 처음 개최된 한 · 중 · 일 환경장관회의를 정례화하여 장거리대기오염, 황해오염에 대한 논의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農事는 一年之大計요 敎育은 百年之大計"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環境保全은 千年之大計'라고 할 수 있다. 지나온 1000년기는 환경과 자원을 이용하고 개발함으로써 인간의 물질적 풍요로움에 힘써온 시대였다. 그 결과 물질적 풍요로움은 크게 성취하였으나 후손의 삶의 터전인 환경은 오염되고 파괴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환경호르몬문제 등 도처에 우리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다.

금년은 지난 천년기를 마무리하는 해이다. 새로운 천년기(Millennium)는 물질적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환경적 쾌적성이 공존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금년은 이를 준비하는 중요한 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는 개발정책과 환경성 제고, 예방적 환경행정의 확립, 환경과학기술의 증진, 환경투자의 확대 등 환경행정추진체계의 획기적 강화가 필수적이다.

민간의 자율적 직업훈련을 촉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

남석현
노동부 훈련정책과장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창의적인 인적자원 개발과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위하여 지난 20여년간 시행되어 왔던 직업훈련의무제가 폐지되고, 99년 1월부터 민간의 자율적인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모든 근로자가 언제 어디서나 쉽고 다양한 능력개발의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새로 시행되었다.

우리나라 직업훈련제도는 76년에 제정된 「직업훈련기본법」의 직업훈련의무제를 근간으로 비진학 청소년 등 풍부한 노동력을 산업인력화하기 위한 양성훈련에 중점을 두고 시행되어 왔다. 그 결과 중화학공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기능인력을 양성·공급하여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후 국제화·정보화의 급속한 진전과 경제 및 노동시장의 여건변화는 물론, 실업자·고령자·여성 등 잠재인력을 노동시장으로 흡수하기 위한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특히, 재직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능력개발의 중요성이 새로이 부각되었다.

한편, 직업훈련법령은 직업훈련의무제를 골자로 하는 「직업훈련기본법」과 95년 7월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이원화되어 훈련체계가 복잡하고 지원체제 등이 미비되어 이와 같은 틀 속에서는 민간의 자율적인 훈련실시와 근로자의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직업훈련기본법」을 폐지하고, 97년 12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제정하여 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체제 개편

그간 직업훈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실시하는 '공공직업훈련', 기업이 실시하는 '사업내 직업훈련',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실시하는 '인정직업훈련'으로 구분되었다.

이중 '사업내 직업훈련'은 광업·제조업·건설업 등 6개 산업의 1,000人 이상 기업에 대해 정부가 직업훈련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불이행시에는 분담금을 징수하여 정부가 필요한 인력을 양성·공급하였다.

반면 1,000人 미만의 사업체는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적용되어 자율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용을 지원받는 체제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법은 정부가 정하는 교과내용·시설·교사 등에 관한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 즉, '기준훈련'과 '그 밖의 훈련'으로 단순화하였다. 그리고 1,000人 이상의 기업도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용받도록 훈련제도를 통합하였다.

'기준훈련'의 경우에는 당해 훈련과정에 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인정을 받도록 하고, '그 밖의 훈련'의 경우에는 지정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보다 훈련비용 지원율의 상향조정 또는 훈련비용의

추가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의 설치비용의 우선지원 · 융자 등에 있어서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창의적인 인적자원 개발과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위하여 지난 20여년간 시행되어 왔던 직업훈련의무제가 폐지되고, 99년 1월부터 민간의 자율적인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모든 근로자가 언제 어디서나 쉽고 다양한 능력개발의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시행되었다.

직업훈련 실시요건의 완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은 직업훈련 실시에 따른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첫째, 종전에는 비영리법인 등 일정요건을 갖춘 자만이 훈련을 실시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영리법인 · 사회단체 · 개인 등도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지정받을 경우에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

둘째,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편찬하거나 검정한 교재를 훈련교재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기업의 특성에 맞게 훈련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교재를 자유로이 사용하도록 하였다.

셋째, 종전에는 면허를 받은 직업훈련교사가 훈련생을 가르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신기술 · 신직종훈련 등에서만 훈련교사가 아닌 자도 가르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훈련과정에 있어서만 훈련기준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로 하여금 훈련생을 가르치도록 하고, 그 밖에 대해서는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훈련교사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였다.

넷째, 훈련생에게 훈련비를 부담시키고자 할 경우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훈련비를 초과하는 고급훈련과정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훈련생에게 일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약정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민간이 자율적인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직업훈련시설의 명칭 사용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였다.

〈표 1〉 新 · 舊 직업훈련제도 비교

종 전		현 행	
훈련종류	보험료율(분담금)	훈련종류	보험료율
◦ 공공훈련 ◦ 인정훈련 ◦ 사업내 훈련	◦「직업훈련기본법」 적용 (분담금 없음) ◦ 〃 · 1,000인 이상(직업훈련 기본법의 직업훈련의무제) : 임금총액×훈련비율-훈련비용 · 1,000인 미만(고용보험법) : 임금총액×(0.5~0.1%)	◦ 기준훈련 ◦ 기준외 훈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및 「고용보험법」 적용 · 1,000인 이상 : 임금총액의 0.7% · 1,000인 미만~150인 이상 : 0.5% · 150인 이상(우선대상기업) : 0.3% · 150인 이하 : 0.1%

직업훈련비용의 지원체계 개선하고 훈련수당에 대한 형평성 제고

종전까지는 직업훈련비용은 훈련사업별로 표준훈련비, 훈련비조견표, 실훈련비 등 지급기준이 상이하였으며, 지원절차와 정산방법도 각각 달라서 복잡하다는 지적과 함께 훈련간 지원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훈련비의 지급기준, 지원절차 및 정산방법을 통일 · 단순화하고, 훈련비용지원체계를 대폭적으로 개선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주가 실시하는 훈련비용은 자율적 결정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에서는 자율결정비용의 액수에 따라 지원율에 차등을 두고 지원키로 하였다.

둘째,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훈련 즉, 기준훈련·실업자직업훈련 등에 대하여는 훈련비 조견표에 따라 일정액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훈련비 지원제도를 개선하였다.

참고로, 조견표란 76개 훈련직종에 대한 시간당 훈련비단가표로서 훈련기간 및 인원에 따라 단가를 산정·제시하고 있으며, 전체 훈련직종의 평균단가는 2,105원이다.

한편, 종전에는 훈련수당이 훈련종류별로 서로 다른 배경과 재원을 토대로 시행됨에 따라 지원체계와 수준이 상이하여 훈련수당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시정·보완하기 위하여 동일직종의 훈련을 받는 동일조건의 실업자에게는 동일액수의 훈련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즉, 훈련생 개인의 과거소득, 재산상태와 훈련직종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고, 훈련생이 훈련수당을 목적으로 훈련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훈련수당 최고액이 최저임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훈련수당은 모든 실업대책 직업훈련에 적용되며, 월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5만원까지 지급된다.

〈표 2〉 사업주에 대한 훈련비 지원기준

<table>
<tr><th>종 전</th><th>현 행</th></tr>
<tr><td>집체훈련
· 자체 : 8개 지원항목 중 실제사용한 금액×훈련과정별·사업규모별지급률(80~100%)×훈련수료율
· 위탁 : 위탁훈련비×훈련과정별·사업규모별지급률(70~100%)×훈련수료율

교육훈련
· 자체 : 강사료 시간당 10만원(연간 50시간 한도)
· 위탁 :
– 훈련기관에서 훈련비 자율결정
– 훈련종료후 비용의 70~90% 지원</td><td>집체훈련
· 기준훈련 : 직종별 훈련비단가×실훈련시간×훈련수료인원
· 기준외 훈련 : 지정받은 훈련비(위탁훈련비)×지원율×훈련수료인원
※ 다만, 직종별 훈련비단가×실훈련시간×훈련수료인원의 1.5배 초과 불가

◀지원금 지원율▶
<table><tr><th></th><th colspan="2">재직근로자</th><th rowspan="2">채용 예정자 등</th></tr><tr><th>우선지원 대상기업</th><th>대규모 기 업</th></tr><tr><td>지정훈련비 시간당 단가가 조견표금액 이하</td><td>90%</td><td>70%</td><td>80%</td></tr><tr><td>조견표의 101~150%</td><td>80%</td><td>60%</td><td>70%</td></tr><tr><td>조견표의 151~200%</td><td>70%</td><td>50%</td><td>60%</td></tr><tr><td>조견표의 200%초과</td><td>60%</td><td>40%</td><td>50%</td></tr></table></td></tr>
<tr><td>현장훈련
· 집체훈련 비용지원 항목의 50%

유급휴가훈련
· 휴가기간중 지불임금과 위탁훈련비 합계액의 70~90%</td><td>현장훈련
· 집체훈련지원금의 50% 범위내

유급휴가훈련
· 휴가기간중 지급한 임금의 1/2~1/3
· 훈련비의 일부(집체훈련비용 지원기준 준용)</td></tr>
</table>

우수훈련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제 실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으로 모든 사업장이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받게 되어 근로자의 능력개발이 촉진되고, 근로자가 전문대 등에 진학시 수업료 저리융자 등을 받을 수 있어 능력개발의 기회가 보다 확대되며, 훈련시장의 개방 등으로 민간 부문의 직업훈련이 활성화되는 한편, 훈련기관간 경쟁촉진으로 훈련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직업훈련실시요건이 완화되고 훈련실시자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반면, 훈련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과 훈련과정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모든 훈련기관에 대하여 연 2회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훈련생들이 훈련기관의 질을 기준으로 훈련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의 결과, 우수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을 각 15% 범위내에서 선정하여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훈련비 단가의 10%를 가산지급하며, 훈련종료 3월 이내의 취업률이 50% 이상인 과정의 경우에는 최종월 훈련비의 10%에 해당하는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래유망직종의 경우에도 당해과정 훈련비의 20% 범위내에서 과정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중점관리대상기관으로 2회 연속 선정시에는 훈련시장에서 배제토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실직자재취업훈련의 경우, 사무서비스직 등 일부 인기직종과 단순직종에 치중되어 산업수요와의 연계가 미흡한 점을 감안, 지방노동관서별로 '훈련과정선정위원회'를 매분기 1회 이상 개최하여 기업체 등의 인력수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훈련수요가 있는 직종에 대해서 우선 개설토록 하였다.

〈표 3〉 훈련수당지급 대상 및 내역

종 전	현 행
◦ 실업자 재취직훈련(고용보험기금) : 36~38만원 ◦ 고용촉진훈련(일반회계) : 3~34만원 ◦ 정부위탁훈련(직업훈련촉진기금) : 10만원 ◦ 대학훈련 · 기능사특별훈련(일반회계) : 8만원 ◦ 창업훈련, 영농 · 영어훈련(일반회계 · 농특세회계) : 비지급	◦ 훈련수당 : 월 3~35만원 · 교통수당(3만원) : 모든 훈련생. 다만, 전역예정병 제외 · 가족수당(10만원) : 재산과세액이 3만원 이하인 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 · 보육수당(5만원)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고 재산세 3만원 이하인 여성 · 능력개발수당(7만원) : 이직일 이전 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실직자 · 우선직종수당(10만원) : 인력부족직종에 대한 수강자

이상에서 살펴 본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훈련의무제의 폐지로 모든 사업장이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받게 되고, 기업은 훈련실적에 따라 납부보험료의 120%(대기업)~180%(우대기업)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근로자의 능력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근로자가 전문대 · 대학 등에 진학할 경우 수업료를 저리로 융자(연리 1%)받을 수 있고, 유급휴가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능력개발의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이다.

셋째, 훈련시장이 개방되고 훈련교재 · 훈련교사 등 훈련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영리 · 비영리법인, 개인 등 민간부문의 직업훈련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훈련성과가 좋은 훈련기관은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훈련기관간 경쟁촉진으로 훈련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방특허출원시대 개막
– 쌍방향 온라인 특허행정서비스 개시

송재기
특허청 정보기획개발담당관

WTO 출범을 계기로 세계가 무한기술경쟁시대에 돌입하면서 기술경쟁력의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기술개발 투자의 확대와 개발된 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출원 및 특허분쟁의 급증으로 종래의 수작업 방식으로는 지식재산권 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한계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주변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특허청은 92년부터 98년까지 7년에 걸쳐 「제1차 특허행정 전산화 7개년계획」을 추진하였으며, 그 핵심사업인 특허넷(일명 전자출원) 시스템을 99년 1월 1일 개통하여 우리 국민 누구나 안방에서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출원은 물론이고 각종 민원을 쌍방향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특허행정 시대를 열었다.

'특허넷시스템' 개통으로 안방에서 특허·의장·상표 출원 가능

'특허넷(KIPONET)시스템'은 지난 3년간 특허청이 온라인 전자출원체제 구축 및 특허기술정보 보급촉진을 통한 對국민 특허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하여 연인원 9만4,915명, 소프트웨어 개발비 138억원과 하드웨어 구입비 179억원 등 총317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정보화 사업으로서, 95년 11월 개발에 착수한 이래 FD(플로피디스크) 부본 출원 시행(96. 6), 서면출원에 대한 선입력을 위한 특허문서전자화사업 개시(97. 11), 특허문서교환을 위한 국제표준형식(SGML; 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에 의한 산업재산권 CD-ROM 공보발간 개시(98. 5. 15), 특허법을 포함한 관계법 개정(98. 9) 등 전자출원제도 시행에 대비한 모든 준비를 이미 마쳤으며, 98년 10월에 특허넷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2개월간 시험운영한 후 예정대로 99년 1월 1일에 개통하게 되었다.

특허넷시스템은 기술적으로는 HTTP 프로토콜을 채용한 인트라넷 환경, 문서보안을 위한 전자서명과 암·복호화 기술, 구조가 복잡한 특허문서 관리를 위한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 기술, 신속·정확한 통계정보 추출을 위한 데이터웨어하우스 기술 등 최신기술이 사용된 대규모의 첨단 정보시스템으로서 특히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의 문서표준인 SGML을 100% 적용하여 출원인으로부터의 출원서를 문단(paragraph)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 전자서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99년 1월 이후에 출원되는 모든 출원서는 현행의 '서류'를 기반으로 하는 심사에서 탈피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심사로 대체되어 98년에 이미 구축된 1인 1PC 활용을 더욱 가속화하고 쾌적한 사무실 환경을 구축하는 데 절대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사회적·기술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Y2K 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을 강구하여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99년 1월 1일 특허넷시스템 개통으로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 산업재산권 전분야에 대하여 출원

에서부터 심사 · 등록 · 공보발간 등에 이르는 특허행정 전과정이 전산화됨으로써 안방출원 · 인터넷출원 등 국민과의 온라인체제 구축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의 새로운 장이 마련되고 특허정보의 열람 · 복사, 출원서류에 대한 처리상황 공지 및 각종 서류의 신청 · 접수 · 발송 등이 쌍방향으로 편리하게 서비스됨에 따라 특허행정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전자정부의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허넷시스템 개통으로 산업재산권 전분야에 대하여 출원에서부터 심사 · 등록 · 공보발간 등에 이르는 특허행정 전과정이 전산화됨으로써 안방출원 · 인터넷출원 등 온라인체제 구축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의 새로운 장이 마련되고 특허정보의 열람 · 복사, 각종 서류의 신청 등이 편리하게 서비스됨에 따라 특허행정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전자출원제도로 특허행정의 효율성 극대화

전자출원제도란 민원인이 특허청과 온라인 · 전자방식으로 행정절차를 처리하는 데 관련된 제도를 일컫는 것으로서 우리 국민 누구나 전자출원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전자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청을 방문하여 출원인 등록신청 및 전자문서 이용신청을 해야 한다. 방문이 곤란할 경우, 특허넷시스템 홈페이지(http://kiponet.kipo.go.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특허청에서는 제출된 신청서에 의거하여 출원인 코드(특허청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코드)를 부여하고 전자출원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암호화 키 포함) 등을 신청자에게 무료로 전달해 준다.

그러면 출원인들은 PC와 통신회선 및 장비를 갖추고 보급받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전자문서 · 출원서류 작성 소프트웨어로 출원서 등 출원내용을 작성한 후 암호화 키를 사용하여 출원서 파일을 제작한다. 그리고 부여받은 출원인 접속코드를 사용, 특허청의 특허넷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출원시스템으로 전송하고 접수증 및 출원번호를 확인하는 것으로 온라인 출원절차가 완료된다. 온라인 출원을 위한 통신회선은 현재 일반전화 · ISDN · 전용회선 등이 지원되고 있다.

한편 온라인 출원이 곤란한 출원인들은 출원 매체는 종래와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혹은 플로피디스크에 담아 출원할 수 있다. 단, 플로피디스크의 경우 96년 7월부터 98년 12월까지는 FD부본출원제도가 시행되어 서면 정본에 플로피디스크가 부본으로 제출되었으나 금년부터는 정본으로 플로피디스크만 제출하면 된다.

특허넷시스템의 개통으로 전자출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종래와는 다른 여러 가지 제도가 도입 되었는데, 그 주요 제도로는 출원인/대리인 등록제도, 전자문서 이용 등록제도, 포괄위임장제도, 수수료 납부제도, 서식개정, 전자서명 및 암호화 절차의 도입 등이 있다.

출원인/대리인 등록제도 및 전자문서이용 등록제도

종래 서면출원에서는 매 출원시마다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인적 정보를 기입해야 했으며, 이로 인하여 출원인/대리인에 대한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저하되어 데이터 관리 및 각종 통계자료의 신뢰성이 낮았다. 또한 본인의 인장 날인여부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였으나 전자출원 시행에 따라 본인 확인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출원인/대리인 인적사항을 한번 등록해 놓고 추후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출원인/대리인 등록제도 및 전자문서이용에 관한 본인의사확인이 가능하도록 전자문서이용 등록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제도 적용 대상범위는 특허 · 실용신안 · 의장 · 상표에 관한 민원처리를 원하는 모든 출원인 및 대리인, 법정대리인, 변리사 이외의 임의대리인, 외국인 및 외국법인이 해당되며 99년 이전에 기출원하여 계류중인 건에 대한 출원인도 의무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등록시 출원인/대리인의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과 전자문서 이용여부 및

비밀번호 등을 등록해야 하며 변경 관련절차에 의거하여 등록된 정보를 변경등록할 수 있다. 또한 이중등록으로 인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넷 시스템에서 주민등록번호 혹은 법인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이중등록 여부를 자동검증하도록 하였다.

포괄위임장제도 및 수수료납부제도

현재 채택하고 있는 개별위임장제도 아래에서는 위임장에 위임하는 특정사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매 출원건마다 위임장을 첨부하고 위임장 내용이 동일할 경우에는 원용한다는 취지를 명기하고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출원인의 부담이 발생하였고 온라인에 의한 전자출원에는 증명서의 서면제출은 전자출원 개념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수차례에 걸친 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위임장에 특정사건을 명시하지 않고 한 장의 포괄위임장으로 현재는 물론 장래의 여러 사건에 대해 포괄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이 특허청에 절차를 행할 수 있게 하는 포괄위임장 제도가 도입되었다.

따라서 특허 · 실용신안 · 의장 · 상표에 관한 행정절차를 요구하는 모든 출원인 및 대리인은 포괄위임등록을 할 수 있으며 하나의 포괄위임장에 산업재산권 4권리를 동시에 위임할 수 있다. 포괄위임등록시 출원인/대리인 1:1 관계에 하나의 포괄위임 등록번호가 부여되므로 하나의 포괄위임등록신청서에 복수의 대리인을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공동출원, 복대리인 선임, 포괄위임 철회, 포괄위임 원용 제한, 포괄위임 등록 철회 등의 경우에 대한 처리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종래 각종 수수료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 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에 따라 현금에 의한 동시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수수료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을 규정받고 있었다. 즉, 출원료는 출원시에, 등록료는 등록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특허료 · 등록료 및 수수료는 별지 서식에 의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종래 수수료 납부방식은 수납절차가 번잡하고 수납집계의 정확성 및 적시성이 결여되며 수납확인 업무가 형식화되어 수수료 대사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어 왔다. 더욱이 온라인 전자출원 시행시 과거 출원서류 뒷면에 은행수납 영수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수수료 수납방식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를 대체할 새로운 수납방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수수료 납부확인의 신속성과 정확성 증대를 목표로 새로운 수납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새로운 수수료 수납제도에서, 특허청에서는 접수번호를 부여받고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납부자 번호로 하여 익일까지 은행에 납부하는 현금에 의한 후납제(당일 납부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은행마감후 온라인 출원을 하는 신청인을 위해 익일까지 수납)를 채택하고 대사업무는 기계적 방식 심사시 이미 부여된 접수번호와 재정경제부 송부입금 내역을 전산적으로 비교하여 처리토록 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납부절차의 편의를 제공하고 수납에 따른 시간 및 경비부담을 경감시키는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익일을 경과하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제도 악용의 가능성, 보정처리시 불수리 처리건과 처리방식의 이원화, 방식심사 업무부하 가중 등의 이유로 인하여 납부금액을 반환처리하고 보정통지하여 해당 민원인이 보정서 제출시 받은 접수번호를 가지고 수수료를 다시 납부하도록 한다. 이때 수수료는 당초의 수수료에 보정료가 가산된 금액으로 증액된다.

서식개정과 전자서명 및 암호화

종래의 서식은 복잡한 괘선구조이므로 작성이 불편하고 전자화에 부적합하며 공통정보의 불일치로 인하여 데이터 관리가 불편한 점 등 전자출원에 그대로 적용되기가 곤란하였다. 따라서 온라인 전자출원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관련 서식의 개정이 불가피하였다.

특허청은 97년부터 산업재산권 4권리에 대한 서식을 검토하여 총 150여개의 서식을 개정키로 하였다. 개정의 기본방향은 괘선을 삭제하여 데이터 추가 및 관리의 용이성을 확보하고 기재항목을 통일화 · 구조화하여 서식을 효율화하였다. 또한 식별항목을 사용하여 향후 광학문자 인식기술의 적용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전자출원제도 도입에 따른 기재내용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서식성격에 따라 전자형태가 적합한 서식과 그렇지 않은 서식을 구분하여 '전자문서용'과 '서면용'으로 표시하여 민원인들의 구분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세계특허망(WIPONET)이 개통되는 2000년 상반기부터 특허 글로벌네트워크를 통해 '국제출원' 이 가능하게 되고, 외국 선진특허정보를 WIPONET을 통해서 무료로 검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국민 · 대산업계 특허행정서비스 및 국가 정보화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출원은 실제적으로 통신망을 통하여 출원서류 등을 주고 받는 행위가 반드시 수반되는데, 출원서류는 공개 이전까지는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전자출원에 따른 통신보안 및 시스템 보안이 중대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보안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출원인이 접속하는 외부망과 청내 직원이 사용하는 내부망을 분리운영하고 있다. 또한 청내부 시스템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할 가능성이 있는 출원접수 부분(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출원서류와 출원접수 시스템)의 보안강화를 위하여 출원서류에 대한 암호화, 사용자 인증, 전자서명 등의 첨단 보안기술을 채택하여 해킹 및 악의적 접근의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

특허전자행정으로 전자정부의 기반 구축

특허넷시스템 개통의 의의 및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안방출원시대 개막으로 對국민 서비스의 새로운 장이 마련(사실상 세계 최초)되어 산업재산권 전체에 대한 전자출원이 가능하고 안방에서 PC와 전화선 등을 이용, 특허청과 직접 대화하면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과의 쌍방향 온라인 체제 구축으로 특허출원서 등 각종 서류의 신청, 열람 · 복사, 행정처리상황 공지 등이 쌍방향으로 서비스되어 국민의 편의성이 극대화될 것이다. 또한 전자출원 데이터를 이용한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 확충으로 2000년 시행 예정인 특허기술정보 무료서비스를 위한 인프라가 확보되어 우리나라가 지식정보사회로 진입하는 데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넷시스템은 출원에서부터 심사 · 등록 · 공보발간에 이르는 특허행정 전과정을 전산화하여 산업재산권 전반의 서류 없는 행정을 통한 행정능률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종래 서면출원 · 열람 · 발송이 온라인 전자출원 · 서비스로 변화되고 수작업에 의존하던 선행기술검색이 전산검색으로, 종이문서에 의한 관리 및 결재가 전자문서관리 및 전자결재 등으로 변화됨으로써, 인력증원억제(업무효율화) 효과는 99년 4%, 2000년 13%, 2001년 21%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또한 급증하고 있는 출원건수[92년 128천건(특허 31천건) → 97년 254천건(특허 93천건)]에도 불구하고 심사처리기간(특허)은 92년 33개월, 97년 36개월, 그리고 최근에는 28.1개월로 심사처리기간 단축이 가속화되고 있다.

출원비용의 경우 특허출원서 100면 기준으로 약 21만원이 절감되고, 공보발간비의 경우 출원서 입력작업이 불필요하여 향후 5년간 약 700억원 절감되며 책자 및 종이보관을 위한 공간도 매년 약 500㎡ 정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매년 약 7,000건에 대한 자료복사가 불필요하게 되며, 최신 특허정보의 신속제공으로 산업계의 중복투자 방지 및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여 향후 막대한 중복 연구투자비 절감효과가 예상되는 등 국가 전체적인 경비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특허넷시스템의 개통을 시작으로 99년부터 앞으로 3년간 978억원을 투입하여 기술개발종사자-특허청-WIPO를 글로벌네트워크로 연결하여 對국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제2차 특허행정정보화 3개년계획' 을 확정하고 추진중이다.

제2차 계획에 따르면, 특허넷시스템 개통을 계기로 수요자 위주로 특허넷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강 · 확충함으로써 '쌍방향 온라인' 민원처리를 강화하고,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3,300만건(98.11 현재)에 달하는 특허기술정보를 2000년 1월부터 특허정보 인터넷서비스(KIPRIS)를 통하여 '무료' 서비스하여 70만명에 달하는 벤처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사자 · 발명가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하고 연간 10조원이 넘는 기술개발(R&D)의 중복투자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자 추진중이다. 또한 세계특허망(WIPONET)이 개통되는 2000년 상반기부터 국내특허출원인이 특허 글로벌네트워크를 통해 '국제출원' 이 가능하게 되고, 9천만여건에 달

브라질 금융위기의 재연

김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브라질의 금융위기는 97년 아시아 위기의 충격에 따른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지난해 8월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에 따른 신흥경제권의 투자신뢰도 하락의 여파로 지난 1년 반 동안 지속되고 있다(필자 註 :本誌 98년 11월호 110쪽 참고). 다만 세계 8위권인 브라질의 경제규모와 시장의 역동성에 비추어 직·간접투자자본이 꾸준히 브라질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 정부나 국제사회의 위기대응 여하에 따라 브라질 금융상황은 큰 폭의 희비교차를 겪고 있는 것이다.

긴축정책 둘러싼 내부갈등이 금융위기 재연 배경

브라질의 98년 위기상황은 11월 13일 국제통화기금(IMF)과 415억달러 규모의 긴급금융지원 협상이 타결되면서 진정국면에 들어갔었다. 브라질 정부는 IMF의 금융지원 조건으로 98년말 GDP 대비 8.0%인 640억달러에 달했던 재정수지 적자를 99년에 절반 수준인 4.7%까지 감축해야 했다.

그러나 12월초 브라질 의회에서 재정개혁 법안인 수표세 인상, 공무원연금 기여금률 인상법안 등이 부결됨으로써 브라질 정부의 재정긴축 실행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국제사회의 對브라질 지원 움직임에 힘입어 월 10억달러대로 급감했던 외자유출이 12월 들어 다시 51억달러로 확대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새 주지사 취임 직후인 99년 1월 6일 브라질 27개주 중 경제규모 3위인 미나스제라이스(Minas Gerais)주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한 부채상환(총부채 약 150억달러, 월 상환액 6,700만달러)을 90일간 지불중지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던 리우그란데두술(Rio Grande do Sul)주를 비롯한 일부 주정부들이 이에 동조함에 따라 브라질 연방정부마저 채무지불불능 상태로 치달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투자자들 사이에 확산되어 금융위기는 재연되고 만 것이다. 따라서 최근 브라질 금융위기의 재연배경에는 긴축정책의 실행을 둘러싼 여야간, 연방-지방정부간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주정부의 반란' 이후 급격한 외자유출이 이어지자 브라질 정부는 고정환율제 아래에서 헤알화 가치를 방어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1월 13일 전격적인 헤알화 평가절하를 단행했으며, 그간 헤알화 가치고수를 강조해왔던 프랑쿠(Gustavo Franco) 중앙은행 총재를 경질하였다.

헤알화는 같은 날 종전의 달러당 1.12~1.22 헤알에서 1.20~1.32헤알로 8% 이상 평가절하되었다. 이튿날에도 추가적인 평가절하 가능성을 우려한 외자유출이 하루만에 18억달러에 달했고, 마침내 브라질 정부는 1월 15일 헤알화의 방어를 포기하고 사실상의 변동환율제를 채택했으며 1월 18일에는 이를

공식 발표했다.

또한 브라질 정부는 외자유출 억제, 인플레 재연 방지를 위해 중앙은행 보조금리(TBAN)를 종전 36%에서 41%로 대폭 인상하였다. 그러나 외환시장의 불안은 계속되어 헤알화의 가치는 1월 29일 달러당 1.98헤알까지 폭락하였다.

향후 브라질 경제향방의 관건은 각종 정치문제의 원만한 해결과 신경제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진정, 헤알화의 신용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IMF와의 합의에 따라 정부의 추가적인 긴축재정은 물론 통화긴축이 잇따를 전망이어서 브라질 경제는 심각한 경기침체와 실업률 급증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사태 더욱 악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은,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브라질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일제히 하향 조정한 것이다. 1월 14일 S&P社는 브라질의 장기외화표시채권을 기존의 BB-에서 B+로 한 단계, 헤알화 표시 장기채권을 BB+에서 BB-로 두 단계 하향 조정했다. 1월 25일 DCR社는 브라질이 금년 중순까지 고금리를 낮추지 않을 경우 헤알화 표시 채권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33%에 달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피치 IBCA社는 1월 26일 브라질의 장기외화표시 채권등급을 투자부적격인 B+에서 지금불능 가능성 등급인 B로, 헤알화 표시 채권등급도 BB-에서 B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초인플레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결국 1월 29일에는 금융기관의 부도사태나, 브라질 정부의 예금동결 가능성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예금인출사태가 속출했다.

2월 들어 IMF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브라질 정부의 시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취임한 지 3주도 채 되지 않은 로페스 중앙은행 총재가 2월 2일 해임되었고, 신임 총재에 아르미니우 프라가(Arminio Fraga)가 임명되었다.

프라가 신임 총재는 91~92년 중앙은행에 재직시 국제채권단과 브라질의 외채협상을 담당했으며, 최근에는 세계적인 소로스펀드의 고위자문관을 역임한 시장경제원칙에 충실한 인물로 알려지고 있다. 성장론자로 알려진 로페스 총재는 그간 긴축정책을 추구하는 말란(Pedro Malan) 재무장관 등 통화론자들과의 마찰이 표면화되고 있었다.

이 같은 조치는 단기적으로 투자자신뢰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속락세를 보여오던 달러 대비 헤알화 가치는 다소 안정기미를 보이기 시작했고, 외자유출규모도 크게 감소해 외환보유고는 1월 29일 361억달러(IMF 1차지원금 포함)에서 2월 3일에는 359억달러를 기록했다.

긴축정책 추진 능력 여하가 문제해결의 열쇠

이상과 같은 브라질의 금융위기 재연상황 아래에서 향후 문제해결의 궁극적인 열쇠는 의회 및 주정부, 국민을 상대로 한 브라질 정부의 긴축정책 추진능력 여하와 IMF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 수준에 달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카르도주 정부는 지난 95년 1월 집권 이후 헤알플랜(Real Plan)의 연장선상에서 세제개혁, 사회보장제도개혁, 행정개혁, 민영화 등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기득권세력의 강력한 저항과 의회내의 반발로 번번히 지연되어 대통령의 비범한 정치적 수완에 의지해 완만한 개혁만을 이어올 수 있었다. 그러나 98년 10월 실시된 선거결과로 여권 6개 당의 하원 의석수가 종전 396석에서 381석으로 감소, 지난 2월 1일 새로 개원된 의회에서 앞으로 정부가 세수인상 및 정부지출 삭감 등 추가적인 긴축재정정책과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개혁입법을 추진하는 데는 종전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둘째, 지난 1월 18일 7개 야권성향의 주지사들은 연방정부에 대해 2월 5일까지 부채재협상 의사 여부를 알려주도록 최후통첩을 보낸 바 있다. 1월 28일 카르도주 대통령이 2월 9일 야권성향의 주지사들과

만날 의사가 있다고 밝힘에 따라 다소 해결 기미를 보였으나 주정부들이 협상조건으로 제시한 요구조건에 카르도주 대통령이 반발, 예정된 회담을 무기한 연장함에 따라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야권성향의 7개 주는 물론 대부분의 브라질 주정부들이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금번과 같은 사태는 추후에도 재연될 소지가 많다.

브라질 27개 주정부들이 중앙정부에 지고 있는 총 부채는 약 850억헤알(98년말 현재 미화 70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재정건전화 방침의 일환으로 98년중 각 주정부들과 △ 30년 상환 △ 연금리 6~7% △ 주정부 재정수입 11.5~15%의 납입 등을 조건으로 한 일련의 부채상환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 주정부들이 제기하는 채무재협상 조건은 주정부수입 중 부채상환 납부율이 5%를 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지만 이를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

셋째, 카르도주 대통령은 자신의 인기도 하락에 따른 정치적 입지의 약화로 개혁정책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카르도주 대통령은 지난해까지 집권 1기 동안 인플레 억제의 성공에 힘입어 98년 대통령의 중임을 허용하는 헌법개정을 통해 10월 5일 압도적인 지지(득표율 53.06%)로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카르도주 정부가 자유변동환율제를 도입하면서 헤알플랜 고수라는 당초 국민과의 공약을 저버림은 물론 인플레가 재연될 소지가 많아 향후 카르도주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헤알화가치 급락에 따른 정부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세수인상 및 세출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극심한 경기침체와 더불어 실업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정치사회적인 불안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어서, 카르도주 정부에게 커다란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넷째, IMF는 브라질에 파견한 경제실사팀을 1월 31일부터 가동시켰다. 2월 1일에는 말란 재무장관과 유대가 긴밀한 피셔 IMF 부총재가 브라질을 방문, 협상팀에 합류함으로써 협상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2월 4일 브라질 정부는 IMF와의 신경제정책 목표에 대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 브라질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 지속 △ 거시경제정책의 목표를 인플레 억제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긴축통화 및 재정정책 실시 (99년도 인플레는 10.0% 이하, 경제성장률은 -2.5~-3.5% 전망) △ 정부부채의 GDP 비중을 2001년까지 46.5%로 축소 △ 금리는 인플레 억제를 위해 신축적으로 조정하되 당분간은 고금리 유지 △ 금융체제의 현대화 및 체질강화,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 방안 강구 △ 44억달러 규모의 추가적인 재정지출 감축, 금년도 기초재정수지 흑자목표를 2.6%에서 3.0~3.5%로의 확대 등이다.

향후 브라질 경제향방의 관건은 그간 브라질 경제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각종 정치문제의 원만한 해결과 IMF와 합의한 신경제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진정, 헤알화의 신용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IMF와의 합의가 정부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재정흑자 규모의 상향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데다 인플레 억제를 위해 고금리 유지를 명시하고 있어 브라질 정부의 추가적인 긴축재정은 물론 통화긴축이 잇따를 전망이어서 브라질 경제는 심각한 경기침체와 실업률 급증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이는 카르도주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좁힐 가능성이 높아 정국안정과 긴축실행 간의 타협안으로서 IMF와의 또다른 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표〉 최근 IMF와 합의한 브라질의 거시경제 목표

	98년 11월 15일	99년 2월 4일
인플레 경제성장률	2.0% -1.0%	10.0% 이하 -3.0%
기초재정 수지흑자 (GDP대비)	1999년: 2.6% 2000년: 2.8% 2001년: 3.0%	1999년: 3.0~3.5% 2000~2001년 :상향조정
정부부채규모 (GDP대비)	1999년: 46.7% 2000년: 46.8% 2001년: 46.5%	2001년까지 46.5% 이하

입찰담합의 효율적 규제방안

어용호/공정거래위원회 공동행위과 사무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건설업계 및 제조업계에서는 우리 사회의 독특한 사회 · 문화적 풍토 아래에서 오랜 기간 담합의 관행이 지속되어 왔으며, 특히 이러한 담합관행은 건설공사 발주 등 공공구매(정부조달) 시장에서 더욱 두드러졌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입찰담합은 경쟁의식과 질서에 기초한 것이라기보다는 상호조정과 협조에 바탕을 둔 反경쟁적인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의 공동행위 위반사건 가운데서도 가장 전형적인 카르텔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입찰담합은 본래 경쟁저해성이 큰 것은 물론이고 국제간 정부조달협정에 의거 97년부터 이미 국내 조달시장이 외국기업에게 개방되는 등의 여건변화를 감안하더라도 이제 입찰담합이라는 비경쟁적 관행은 더 이상 통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 이에 따라 경쟁당국의 입장에서는 국내업계의 입찰담합 관행을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입찰담합은 자유경쟁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국내외적으로 규제 대상

입찰담합이란 물품구매나 건설공사의 위탁 등 발주자가 의뢰하는 목적물에 대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모하여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은 "사업자는 계약 · 협정 ·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라고 규정하여 공모에 의한 경쟁제한성이 있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합의만 하여도 법위반으로 보는 매우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담합은 경쟁을 제한하고 이를 통해 독점이윤을 실현하는 등 자유경쟁원칙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행위이므로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담합(또는 카르텔)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적으로도 금지대상으로 삼고 있는 담합행위가 경제적으로 어떤 폐해가 있으며, 대부분의 나라가 왜 이를 규제하는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담합은 통상 경쟁가격 수준보다 높게 낙찰가격을 형성하여 이른바 안정적인 독점이윤을 보장하게 되

며, 그 결과 공공사업에 대한 담합행위의 경우 참가업체들이 정한 자의적 가격 수준과 경쟁가격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당하게 유출되어 결국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둘째, 담합에 참가한 사업자들간에는 품질이나 서비스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상호교섭을 통한 안정적 수주활동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생산성 향상 노력이 저해된다.

셋째, 담합에 참가한 사업자들은 자체 결속력을 통하여 잠재적 경쟁자들(potential competitor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여 결과적으로 관련산업의 혁신을 저해하게 된다.

넷째, 담합을 방임하면 궁극적으로 시장의 경직성과 불균형을 초래하여 자유시장경제의 최대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자원배분의 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엄격히 규제를 하는 것이다.

감시 · 처벌의 강화와 함께 담합유인환경 제거가 중요

현실여건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자리잡고 있는 입찰담합 관행을 일시적 · 획기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담합의 발생가능성 측면에서 사업자간 공동이익이 존재하는 한 담합의 유인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감시활동은 인력증원의 어려움 등 행정적 한계뿐만 아니라 담합행태가 더욱 지능화 · 은밀화됨에 따라 적발 자체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담합이 관행화된 우리의 현실여건을 감안해 볼 때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담합유인환경으로 작용하는 제도적 요인도 함께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실천방안을 수립 ·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직권조사의 지속적인 강화로 담합의식을 변화시켜야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업계에 관행화되어 있는 담합의식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입찰담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담합참가의 유인환경에 놓여 있는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 검찰 등 감시기관으로부터 항상 감시받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담합에 대한 정보를 상시 수집할 수 있도록 조달청 · 한국도로공사 등 8개 대규모 발주기관으로부터 입찰관련 기초자료를 통보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게 통보받은 자료나 다른 경로를 통해 입수된 담합관련 정보 등을 토대로 사전에 충분한 예비조사를 거쳐 담합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되는 입찰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담합행위가 적발될 경우 통상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고액의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및 형사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해 나감으로써 업계에 만연된 담합관행을 근절시켜 나가는 것은 물론 잠재적 담합참가업체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업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이 직권조사를 확대해 나갈 경우, 그 반작용으로 건설업체간에 경쟁이 지나치게 심해져 덤핑낙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 등의 문제로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실공사 문제는 철저한 감리제도의 운용 및 하도급업체에게 덤핑낙찰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방안 강구 등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성격이지, 부실공사의 소지가 있다고 하여

>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입찰참가업체수를 20개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참여업체수를 확대하고, 도로공사 등에서처럼 여러 구간으로 분할발주하는 것은 담합의 유인동기가 되므로 가급적 소규모 분할발주를 억제해야 하며, 낙찰방식도 가격위주가 아니라 설계능력 및 기술력 등을 고려하는 일괄발주방식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

명백한 위법행위인 입찰담합관행을 용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입찰담합의 유인환경으로 작용하는 관련제도 개선 필요

입찰담합의 유인환경으로 작용하는 관련제도를 함께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입찰담합의 행태 및 관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와 직·간접으로 관련되는 예산회계 법규 등 제도적인 문제와 함께 실제 입찰참가자의 행태 등 관행을 심층 분석하여 개선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그동안 입찰담합의 폐해가 심했던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하여서는 건설업체의 덤핑낙찰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 한 담합유인 동기가 사라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인 요인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입찰담합의 유인환경으로 작용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상 입찰참가업체수를 20개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참여업체수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업체들이 담합을 실행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그동안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 개정을 통해 반영을 함으로써 성과가 있었다.

둘째, 도로공사 등에서처럼 여러 구간으로 분할발주하는 것은 업체간 나눠먹기식 담합의 유인동기가 되므로 가급적 소규모 분할발주를 억제토록 하여야 한다. 이 문제는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해결될 성격이 아니고 발주기관이 운용의 묘를 살려 나갈 수 있도록 발주기관 스스로의 노력뿐만 아니라 발주기관에 대한 감독관청에서 적극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할 일이다.

셋째, 이와 함께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도 가격 위주의 단순한 방식에서 설계능력 및 기술력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는 일괄발주방식(turn-key 발주)을 확대·적용하는 방안은 물론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가격요소 이외에 실질적인 공사수행능력을 종합심사하여 실질적인 적격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그 이외에도 현재 관계법규상 도입근거는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제도(CM ; Construction Management)를 조기 시행함으로써 덤핑낙찰의 가능성을 줄여나가는 한편 우리나라 건설업계에서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부실시공의 문제도 같이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부실업체의 덤핑입찰을 제도적·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방안과 함께 반드시 도입해야 할 제도가 바로 상업보증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실질적 보증제도(surety bond) 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그동안 다소 형식적으로 운용해 오던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에서 보험회사 등 상업보증기관을 활용하는 제도로의 변경을 의미한다. 이 제도가 실제 활용될 경우 부실업체가 저가로 공사수주를 하더라도 상업보증기관의 신용평가단계에서 보증을 받기 어렵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에게 공사수주기회가 돌아가게 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찰담합 관련제도의 개선은 실질적인 행태분석과 함께 업계 및 관련연구기관의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하여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입찰담합방지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업계에 관행화된 입찰담합 행태를 직권조사를 통해 개선해 나가고 관련제도의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는 여건 및 시간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업계 당사자의 공정한 입찰질서 정착 필요성에 대한 인식고취를 통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감시기관이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보다는 건설협회 등 관련단체가 스스로 나서서 계도해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겠다.